

Ⅲ. 러일전쟁

1. 러일전쟁의 배경
2. 러일전쟁의 경과와 전후처리

Ⅲ. 러일전쟁

1. 러일전쟁의 배경

1) 러일전쟁과 한국

20세기초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된 일본과 러시아간의 경쟁과 갈등은 드디어 1904년 2월 러일전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일본은 전쟁중 한국을 군사적으로 점령했으며, 전쟁에서 승리한 후 영국·미국·러시아 등 열강들과의 조약을 통해 한국에 대한 보호권을 승인받았다. 그리고 1910년 한국을 합병하였다. 러일전쟁은 이같이 국제정치적으로 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에게는 불행한 사건이었다. 물론 이 전쟁은 본질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러시아라는 두 팽창주의적 세력이 다툰 국제정치적인 사건으로 한국이 ‘가장 중요한 경쟁의 대상’이었는가 라는 점에서는 약간의 異論이 존재하지만, 한국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근대사를 다룬 개설서들은 대부분 이 문제를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국내 학계에서 이 전쟁을 다루는 입장은 어떤 의미에서 단순하다. 우선 이 전쟁을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일본간 각축의 연장선상에서 취급하는 시각이다. 1895년의 乙未事變에서 시작하여 아관파천, 로젠(Rosen)－니시(西)협정, 로마노프(Romanov)－야마가타(山縣)협정, 마산포 조차, 용암포사건 등 한반도를 두고 일본과 러시아가 경쟁한 사건들을 이 전쟁의 전주곡으로 간주한다.¹⁾ 그러나 이같이 한반도라는 국지적 관점으로는 러일전쟁의 실상을

1) 이것은 주로 한국사의 관점에서 러일전쟁을 취급하는 태도이며 《한국사》 41권의 1장에서 충분히 다루었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두번째 시각은 러일전쟁을 일본과 러시아 양국의 팽창주의적 정책이 동아시아라는 지역 수준에서 충돌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 전쟁은 주로 만주에서 전개되었으며 경쟁의 주요 대상은 만주였다. 이것은 주로 동아시아 국제정치사적인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며, 한국근대사보다는 동양외교사에서 이 전쟁을 더 상세하게 다루는 데서 잘 나타나 있다. 이 관점에 의하면 러일전쟁은 한국과는 상관없으며, 관련이 있더라도 한국은 양국간에 주된 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물론 이 시기를 전후해서 전개된 일본의 한반도 침탈은 언급되지만, 러일전쟁 자체에 관한 한, 그리고 전쟁의 과정에서, 한국정부나 국민들은 방관자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종전과 함께 승전국의 전리품으로 취급되는 상황을 맞으면서 경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러일전쟁이 한국의 존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면 양국간의 갈등이 그 근원에서부터 전개과정, 그리고 그 처리에 있어 한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전개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정부나 국민들은 러일전쟁의 전조로서 전개된 중국의 의화단사건이나 영일동맹, 그리고 러·일간의 전쟁에 민감하게 때로는 엉뚱하게 반응하였으며, 이를 한국의 장래와 관련시켜 평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러일전쟁은 동아시아를 무대로 하여 전개된 지역적·범세계적 의미를 갖는 사건이면서도 한국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청일전쟁 후 동아시아 국제관계

19세기 중엽 서방세력들의 동아시아 진출 이후 동아시아 국제정치에 개입하는 열강들은 중국과 일본이란 두 지역세력, 최대의 식민지를 보유한 해상·상업세력인 영국, 태평양 세력인 미국, 대륙으로 동아시아와 연결된 러시아 그리고 유럽의 중심세력인 독일과 프랑스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중 중국은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열강들의 침탈 대상으로 전략해 버렸다. 그외 열강들은 동아시아에서 갖는 이해의 성격, 이 지역이 자국의 대외정책 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이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이 지역의 국제정치, 혹은 세력균형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단순히 세력분포 기능

만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중 일본과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정치적·전략적 이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던 국가에 속한다. 대륙세력이면서 지리적으로 동아시아와 접한 러시아는 19세기말 해상세력의 시대에 뒤이어 등장하는 철도의 발달로 아시아 내륙 깊숙이 수송망을 건설하면서 인도와 중국 등에서 남하정책을 감행하고 있었다. 일본 역시 명치유신 이후, 특히 청일전쟁 이후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팽창정책을 추진했다. 이것은 양국이 한반도와 그 인근 지역문제를 두고 충돌하였으며 한반도는 주요한 대상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일본에게는 한반도는 일본열도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이자 일본이 대륙으로 나아가는 관문으로서, 러시아에게는 극동 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배후 기지였으며 부동항을 보유한 지역으로서 높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양국은 이런 의미에서 이 지역의 기존 국제체제에 변화를 추구하던 세력으로 분류된다.

해양·상업세력인 영국은 아편전쟁 이후 동아시아에 설치한 개항장을 중심으로 소위 비공식 제국망(informal empire)을 구축, 무역을 주도하면서 양자강 유역 등에 광범위한 이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결과 인도제국의 보호와 중국에서 경제적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적·전략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 중국에서는 청일전쟁 이전까지는 중국과의 準동맹적인 관계에서, 즉 친중국적인 입장에서 동아시아 정책을 추진해왔다. 영국은 중국이 그들의 상업적 활동을 저지할 만큼 강력해지기를 원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적·사회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영국의 이권과 해상·상업활동에 유리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반대로 중국의 정치적·사회적 혼란은 경제적 이익 추구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열강들, 특히 범세계적 차원에서 영국과 경쟁하는 러시아가 정치·군사적으로 남진팽창정책을 추구할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었다. 한반도에서도 영국은 중국과의 협조를 통해 러시아의 한반도 진출을 봉쇄해 왔으며, 이런 의미에서 이 시기 중국과 협력하는 영국의 한국정책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²⁾ 미국도 태평양 세력이라는 관점에서 이

2) Kiernan, E. V. G., *British Diplomacy in China 1880~1885*(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39), p. 85.

지역에 어느 정도 정치적·전략적 이해를 갖고 있었지만 정치적 야심보다는 경제적·상업적 이익의 극대화에 주력하고 있었다. 따라서 영국과 미국은 지역정세의 안정을 기본정책으로 삼는 현상유지 세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정치를 이해하는 데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동아시아가 19세기말이 되면 유럽 중심적 국제정치에 종속되는 場으로서 기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보불전쟁 이후 고립되었던 프랑스가 1890년 이후 러시아와의 동맹관계에 들어감으로써 유럽의 국제체제는 전환기를 맞는다. 또 이 시기에 절정기에 도달한 열강들의 식민지 분할도 동맹관계의 변화를 촉진시켰다. 미국도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필리핀을 획득(1898. 12), 이 지역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제정치상의 이같은 변화는 청일전쟁 이전까지 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된 열강들의 동아시아 정책에서 정치적·전략적 중요성이 강조됨으로써 동아시아는 유럽 열강들의 범세계적 국제정치 체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전개되었던 것이다.³⁾ 당시 이 지역에서 최대의 이해를 보유한 영국에게조차 동아시아는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던 대상이 아니었다. 영국에게 중요했던 것은 유럽의 세력균형이었으며, 이것은 구체적으로 독일·러시아·프랑스와의 관계였다. 따라서 ‘영광된 고립’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평가되는 영일동맹도 단기적으로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팽창을 저지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러시아와의 타협(삼국협상)을 가능케 한다는 전략적 의미를 강하게 갖는 것이었다. 즉 영일동맹의 기능은 유럽의 국제정치에 보조적이었다는 평가이다.⁴⁾

마지막으로 유럽의 강대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정책도 간단히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 우선이라는 기본정책을 바탕으로 다른 열강과의 관련 속에서 동아시아·한국문제에 일정한 가치를

3) Langer, William L., *The Diplomacy of Imperialism, 1890~1902*(New York : Alfred A. Knopf, 1951), pp. 167ff. 유럽 세력균형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국제체제의 변화에 대해서는 Morgenthau, Hans J., *Politics Among Nations*, fifth edition(New York : Alfred A. Knopf, 1973), pp. 348~350 참조. 러일전쟁도 이같은 관점에서 유럽의 중심국과 주변국과의 전쟁으로 평가된다.

4) Lowe, C. J., *The Reluctant Imperialists-British Foreign Policy 1878~1902*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1967), pp. 248~251. 따라서 영·러 양국은 동아시아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페르샤·티벳·아프가니스탄 문제만 다루었다.

부여했다. 유럽정치의 중심 세력으로 부상한 독일은 1890년대 이후 세계세력으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해 해군력 확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 전략의 일환으로 1898년 교주만을租借 동아시아에 진출했다. 물론 1880년 이래 독일의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중국과의 교역량이 영국 다음으로 늘어나는 등 동아시아에 대해 관심도 증대되는 추세였다. 그러나 유럽에서 러시아와 프랑스간의 협력관계가 성립되면서 독일의 관점에서는 안보위협이 심각해짐에 따라 유럽 지역의 안보체제 구축에 주력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실질적 이해가 빈약한 동아시아 지역은 관심권에서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동아시아로 통하는 해상로는 영국 함대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독일의 동아시아 정책은 여러 연구서의 평가대로 ‘공세적 방어’나 ‘엄정 중립’을 취하는 정도였다.⁵⁾

프랑스는 19세기 후반기 유럽에서 독일·영국에 비해 그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더구나 유럽정세가 프랑스의 안보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자 주로 인도차이나에 제한된 이해를 갖고 있던 프랑스로서는 아시아 문제에 적극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프랑스는 1890년 이후 독일을 견제하기 위한 러시아와의 동맹을 외교정책의 근간으로 삼았는데, 바로 이 기본정책의 유지가 동아시아 정책에서도 기준이 되는 것이었다. 1895년 청일전쟁 후 러시아를 지원하여 일본의 요동반도 획득에 반대한 3국간섭도 이 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러시아로 인해 동아시아 문제에 과도한 공약을 함으로써 유럽에서 프랑스의 위치가 위협받는 상황이 조성되는 것은 허용치 않았다. 1902년 러시아는 영일동맹에 반발하여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이해를 러불동맹의 정신에 따라 보장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였지만 프랑스는 이 동맹을 동아시아에 확대 적용하기를 거부했다. 프랑스는 또 강력한 해군력을 갖춘

5) Schrecker, John E., *Imperialism and Chinese Nationalism—Germany in Shantung*(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pp. 8~41.

Bee, Ming C., ‘Origins of German Far Eastern Policy’, *Chinese Social and Political Science Review*, 21-1(Apr., 1937).

White, John Albert, *The Diplomacy of the Russo-Japanese War*(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4), pp. 92~94 · 170~178.

영국과 해외에서 대립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더구나 유럽에서 독일을 상대로 잠재적인 동맹국이 될 수 있는 영국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프랑스의 취약성은, 곧 언급하겠지만, 러일전쟁 직전 일본이 러·일 분쟁을 중재하려는 프랑스의 시도를 간단히 거부한 데서 잘 나타나 있다.⁶⁾ 이같은 이유에서 독일이나 프랑스의 존재는 1890년 이후 동아시아 정치에서 끊임없이 등장하였지만 항상 보조적인 역할만 담당했으며 결정적인 계기에는 사라졌던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상과 같은 열강들의 세력분포와 정책목표는 (한국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러일전쟁 前後 시기에 동아시아 국제 정치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세력은 일본·러시아·영국 그리고 미국으로 제한된다는 점이다. 둘째 이 지역에 직접적인 정치적·전략적 이해를 가진 일본·러시아를 제외한 열강들은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해 군사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한반도 문제의 경우는 더욱 그러했다. 한반도는 열강의 국제정치 게임에서 종속적 장으로 기능하는 동아시아 무대에서 그들의 이해가 집중된 중국에 대한 정책에 또 종속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특히 영국과 미국 등 해양세력이 대륙의 강대국을 상대로 군사력을 동원한다는 것은 유럽의 경우 19세기 중엽부터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들은 유럽의 정세가 계속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열강들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동아시아 지역문제에 깊숙이 개입하기보다는 지역의 강대국과 제휴하거나 세력균형의 유지라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기존의 이해를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언급할 것은 동아시아에서 전개된 영국과 러시아간의 대결이다. 소위 영·러 대결은 크림아전쟁에서부터 국제정치를 규정하는 하나의 틀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러시아의 남진정책은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영국의 식민지적 이해와 충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

6) White, *Op. cit.*, pp. 124~127.

Nish, Ian H., *The Anglo-Japanese Alliance-the Diplomacy of Two Island Empires 1894~1907*(London: Athlone, 1966), p. 238.

李昌訓, <20세기 초 프랑스의 對韓정책>(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 《한불 외교사 1886~1986》, 평민사, 1987), 113~117쪽.

은 영국이 항상 일률적인 방식으로 이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영국은 그들의 이해가 중요한 지역에서는 당연히 러시아 남진을 다른 열강과의 동맹(1878 베를린회의)이나 군사적 수단(아프간전쟁, 1878~1885)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저지했다.⁷⁾ 그러나 영국의 이해가 희박한 지역에서는 외교적 흥정이라는 유연한 자세를 견지하였다. 동아시아 사태 중 일부 그리고 한반도 문제가 이에 속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영국은 러시아가 양자강 유역에 대한 영국의 영향권을 인정하는 대가로 만주에서의 러시아 영향권을 인정했다(1899). 한반도에서는 거문도 점령(1885) 이후 러시아와의 대결정책이 현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청일전쟁 이후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상업용 항구를 획득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표명하였다.⁸⁾ 이것은 영·러 대결이라는 국제정치적의 중요한 요소가 동아시아나 한반도에 절대적으로 적용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러일전쟁도 이상과 같은 국제정치적의 구조에서 전쟁의 원인이 싹뻗던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러일전쟁의 기원을 청일전쟁 이후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에서 찾았다.⁹⁾ 즉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패배함으로써 이 지역을 지배하던 중국 중심의 華夷體制가 완전히 소멸되면서 국제체제상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열강들이 동아시아 정책을 조정하면서 전쟁의

7) 영국의 아프간전쟁에 대해서는 Porter, Bernard, *The Lion's Share-a Short History of British Imperialism 1850~1983*, second edition(London : Longman, 1975), pp. 86~88 참조.

8) Salisbury to Satow, 1896. 2. 19(朴日權 편, 《근대한국관계 영·미외교자료집 1887~1898》, 부산대, 1983, 707쪽).

영국이나 미국 외교문서는 관례에 따라 발신인 to 수신인, 날짜, FO(Foreign Office, 영국 외무성, 미국의 경우는 없음), 분류번호, 문서철 번호, 문서번호 순으로 표기한다. 일반적으로 발신인은 해외주재 대사·공사·총영사이며 수신인은 외무장관·국무장관이다. 간행된 문서는 문서의 분류번호 대신 문서집 이름으로 대신하겠다. 예를 들어보면 *FRUS(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BFP(Documents on British Foreign Policy)* 등 이다.

9) Malozemoff, Andrew, *Russian Far Eastern Policy 1881~1904-with Special Emphasis on the Causes of the Russo-Japanese War*(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8).

Nish, Ian H., *The Origins of the Russo-Japanese War*(London : Longman, 1985).

원인이 잉태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화이체제는 아편전쟁 이후 붕괴과정을 겪어 왔지만 열강들은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들의 동아시아 정책을 추진해왔었다. 그러나 일본의 승리와 이에 따른 戰後 처리는 열강들의 동맹관계와 맞물려 열강들의 이해 충돌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세력이 러시아와 영국이다. 청일전쟁 이전까지 친중국적인 정책을 견지하고 또 중국의 패배를 예상하지 않았던 영국으로서는 종전 후 갑자기 동아시아 정책의 동반자를 잃은 상황을 맞게 되었다. 더구나 이 지역에 대한 열강들의 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위가 약화된 영국은 일본의 요동반도 획득을 저지한 3국간섭에서 제외됨으로써 그 취약성이 더욱 노출되었다. ‘영광된 고립’이란 일반적으로 나폴레옹 전쟁 후 영국의 대륙정책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의미에서는 바로 이 시기 영국이 열강들로부터 고립되었다는 일종의 위기감을 나타낸 것이다.¹⁰⁾ 이에 영국은 일본이 이 지역의 신흥 세력으로 부상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영국과 일본의 이해가 ‘충돌하지 않는다’는 평가아래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침략성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정책의 동반자로서 일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¹¹⁾

중국은 영국의 배반과 일본의 중국 침탈에 대항하여 러시아와 협조관계를 형성했다.¹²⁾ 러시아는 1860년 한국과 국경을 접하게 되지만 이 지역에서 인적·물적자원 등 대외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반대로 극히 조심스러운 접근을 시도해왔다. 즉 러시아는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에게는 절대적 이해가 걸린 지역이며 영국은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는 지역이므로 동아시아에서 전쟁 수행능력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러시아가 이들

10) Howard, Christopher, *Splendid Isolation*(金相洙·金元洙 공역, 《대영제국의 ‘영광스러운 고립’》, 한양대 출판부, 1995, 1~2장).

11) Langer, *Op. cit.*, pp. 173~174·185~186. ‘동반자’란 국제정치의 협력과 갈등이란 양 극단적인 현상에서 협력의 최고 형태인 동맹관계를 의미하는 데 영·일 양국의 경우는 영일동맹으로 구체화된다.

12) 중국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던 李鴻章은 영국의 정책변화를 두고 ‘이기적이고 단견’이며, 중국은 영국의 배반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Ibid.*)

3국을 상대로 모험주의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강들은 한국의 개국에서부터 볼 수 있듯이 그들의 동아시아·한국 정책에서 ‘러시아’라는 요소를 항상 고려해왔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¹³⁾

그러나 청일전쟁 이후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팽창이 크게 진척되면서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도 높아진다. 그 계기를 마련해 준 사건이 3국간 섭이었다. 러시아는 패전 후 안보위협을 느끼는 중국을 지원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열강들의 견제를 일거에 떨쳐버리게 되는 것이다. 러시아는 일본의 요동반도 점령은 중국의 정치적 중심부인 북경 주변과 한국의 독립을 직접 위협하는 것이라 경고하고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일본이 이를 중국에 반환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실제로 우려한 것은 일본의 요동 진출이 러시아가 구상하고 있던 시베리아철도와 만주 경영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시베리아철도란 러시아가 중국·러시아 국경선을 따라 건설 중인 노선을 중국·몽고·러시아 3국의 국경선이 만나는 치타에서 만주를 가로질러 하얼빈을 거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계획한 부분을 말한다. 결국 러시아는 일본이 요동반도를 중국에 반환하도록 주선한 대가로 후일 동만주철도로 알려진 이 철도 건설권과, 일본이 시모노세끼조약에서 중국으로부터 획득한 군항인 대련항을 조차하며, 그외 중국과 15년 기간의 방어동맹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다.

중·러관계의 밀착화는 동아시아 지역의 세력균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이었다. 제국주의시대의 철도건설은 19세기말 아프간과 페르시아에서 진행된 영국과 러시아,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진행된 영국과 독일간의 경쟁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적 팽창의 전단

13) Malozemoff, *Op. cit.*, 1~2장, 특히 pp. 15~17.

Langer, *Op. cit.*, pp. 169~171.

청일전쟁도 이런 의미에서 러시아의 시베리아철도 건설로 야기된 동아시아 세력균형의 변화를 우려한 일본의 예방전쟁이라는 측면이 강하다(구대열, 《한국 국제관계사 연구 1—일제시기 한반도의 국제관계》, 역사비평사, 1995, 27~28쪽). 한국의 개국에 있어 러시아의 간접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구대열, 〈한국의 대서방 개국 문제의 재검토〉(《사회과학논집》 3, 이화여대, 1983) 참조.

계로 평가되는 것이다. 일본 역시 이같은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한반도의 철도 건설에 착수하며, 열강들은 이후 일본이 철도건설을 통한 영향력 확대가 합방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했다.¹⁴⁾ 러시아도 동만주철도의 경비를 구실로 경비병을 파견할 것이며 또 철도의 완성 후 필연적으로 뒤따를 경제적 침투를 고려하면 동만주철도 부설권의 확보는 중국영토의 추가분할 내지 만주합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러시아는 이 철도의 황해 출구를 구실로 후일 남만주철도로 알려진 지선부설권과 여순항을 획득함으로써 러시아의 팽창은 북만주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정치적 중심지인 발해만까지 확장되며, 자연히 한반도도 그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다.¹⁵⁾

그러나 한국의 관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1896년 6월에 체결된 李鴻章—로바노프(Lobanov)조약으로 알려진 중·러 비밀군사동맹이다. 이 조약은 러시아가 동만주철도에 대한 대가로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일본의 침략에 대응한다는 것인데 그 대상 지역을 동아시아의 러시아 영토, 중국 및 한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이 포함된 것은 高宗의 아관파천(1896. 2)으로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됨으로써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이 만주와 한국을 포괄적으로 취급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이때까지 한반도에 관한 한 온건했던 러시아의 정책이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후일 러일전쟁에서 양국의 전쟁목표가 만주인가 혹은 한반도인가라는 논의와도 관련되는 부분이다.

러시아의 팽창정책은 동아시아 지역수준에서는 영국과, 한반도라는 국지적

14) Jordan to Grey, 1914. 11. 16, FO/371/2018(83412/35445).

Jordan to Curzon, 1919. 9. 5, *DBFP*, First Series, Vol. 6, p. 731.

15) 이 시기 만주 철도건설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조된다.

Adu, Emmanuel O., 'British Diplomatic Attitudes towards Japanese Economic and Political Activities in Korea, South Manchuria, Kwantung and Shantung 1904~1922'(Ph.D thesis, University of London, 1976), 3·5장.

Lin, Tung-chi, 'Political Aspects of the Japanese Railway Enterprises in Manchuria', *The Chinese Social and Political Science Review*, 14(1930. 4).

Spinks, Charles Nelson, 'Origin of Japanese Interests in Manchuria', *The Far Eastern Quarterly*, 2~3(May, 1943).

수준에서는 일본과 경쟁관계를 재연시켰다. 영국은 러시아의 팽창이 만주에 한정되지 않고 영국의 영향권인 양자강까지 계속 남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상유지 혹은 세력균형을 파괴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러·일간의 각축은 로바노프-야마가타협약(1896. 6), 로젠-니시협약(1898. 4) 등을 통해 한국의 독립을 명목상으로 인정하면서 실제로는 공동관리에 합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것은 한국의 독립이 이 시기 상당부분 손상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38선 분할 획책, 러시아에 의한 1896년 압록강 유역 목재이권, 1900년 마산포사건, 1903년 5월의 용암포사건 등이 일어났던 것이다.

3) 의화단사건과 열강관계

청일전쟁 이후 열강간의 갈등은 1900년 중국의 義和團사건으로 더욱 깊어졌다. 이 사건은 서방제품의 수입으로 농촌경제의 파탄과 실업자의 양산, 외세의 침탈 앞에 무기력한 정부관료에 대한 민중들의 불만, 그리고 기독교도와 비기독교도들 간에 소위 教案이라는 분쟁 등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山東省·直隸省에서 의화권 교도들이 반기독교를 내세운 仇教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운동은 청일전쟁의 패배와 전후 가속화되는 열강의 침탈에 의해 팽배된 반외세적 분위기 속에서 扶清滅洋의 배외운동으로 성격이 바뀌어졌다. 더욱이 중국 정부내에도 보수·배외파인 端郡王(Prince Tuan)이 總理衙門 수석대신과 軍機大臣으로 권력을 장악하여 의화단을 義民化하고 정부의 정책을 攘夷라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중국정부의 정책과 의화단운동을 동일시하는 방향으로 급회전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중국과 서양열강(일본을 포함하여)간의 전쟁으로 확대되었던 것이다.¹⁶⁾

16) 서태후의 칙서는 ‘서양 열강들이 중국영토를 호랑이 같이 탐욕스럽게 침탈하며 중국이 돈도 군대도 없어 그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침략자들을 무찌르기 위해 모든 인민과 지방관리들은 쫓겨갈 것’을 촉구했다(Langer, *Op. cit.*, p. 693). 러일전쟁 전 한국 신문들도 서태후의 칙서를 인용하면서 반외세적 분위기를 조성했다(구대열, 《제국주의와 언론-배설. 대한 매일신보 및 한·영·일 관계》, 이화여대출판부, 1986), 116쪽.

의화단은 19세기 후반 제국주의시대 유럽국가들의 침탈 대상 지역에서 일어난 반제국주의적 성격의 사건에 대해 제국주의 열강들이 단결하여 대응하였던 유일한 사건이다. 그러나 열강들은 의화단 민중들이 포위한 북경공사관의 구조라는 목적에서만 일치했을 뿐 그 이상의 공동목표는 없었다. 따라서 일차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부터 곧 과거의 경쟁관계로 되돌아갔다. 의화단사건에 임하는 열강들의 입장은 이같은 의미에서 청일전쟁 이후 러시아·독일·프랑스가 일본의 요동반도 점령을 저지한 3국간섭과 같이 일회적인 것으로 영속성을 갖는 동맹관계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이 사건의 진행 및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각국의 정책 차이는 러일전쟁으로 연결되었다고 하겠다.

의화단사건 후 동아시아 열강관계의 변화를 주도한 세력은 러시아였다. 러시아는 사건의 초기부터 西太后的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받을 정도로 의화단사건을 러시아의 권익을 극대화하는 데 이용했다. 의화단의 세력이 만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중국을 단호히 응징하려는 열강과 보조를 맞추기보다는 만주의 철도보호라는 명목아래 만주에 군대를 집결시켰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같은 만주우선정책은 겨우 500여 명의 러시아인들이 거주하며 상업적 이해도 희박했던 북경지역에 비해 철도 등 그들의 이해가 집중되었던 만주가 중요했다는 점에서 정당한 것이었다.¹⁷⁾ 그러나 러시아의 정책은 만주에 대한 기존의 이해 보호로 끝나지 않고 중국정부의 환심을 사면서 만주점령을 영구화하고 나아가서 북경 지역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었다. 특히 시베리아철도의 건설로 러시아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적·물적자원의 빈곤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러시아의 위협은 과거 일시적이었던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만주점령을 둘러싼 열강과의 갈등이 곧 러일전쟁의 원인이며, 이것은 한반도가 아니라 곧 만주가 러일전쟁의 주요 대상이었다는 견해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일본의 관점에서는 의화단사건은 반외세이지만 일차적으로는 반서양적이며 반일적인 성격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은 일단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일본만이 지리적으로 북경공사관의 구출에 필요한

17) Nish, *Op. cit.*(1985), p. 83.

대규모 군대를 단시일 내에 파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였다. 따라서 열강들은, 특히 1899년 이후 남아프리카전쟁에 매여 있던 영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력히 요망했다. 당시 유럽에서 영국과 해군력 경쟁을 벌이던 독일은 이를 두고 영국은 중국에서 다른 국가가 ‘화로에서 영국의 밤을 꺼내 주기를 원한다’고 평했다. 여기에서 말한 ‘밤’이란 중국에서 열강 중 최대 규모인 영국의 이권을 말한다.¹⁸⁾ 일본은 열강들로부터 일본군의 출병에 대한 동의를 확보한 후 1개 사단을 동원, 의화단을 진압했다. ‘북경의 55일’로 알려진 공사관 구출작전을 통해 일본은 유럽 열강들과 처음으로 공동작전을 전개하면서 군사적 능력을 과시하고 또 열강의 방침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비로소 열강들과 대등한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이 작전을 통해 일본은 영국에게 잠재적 동맹국으로서 능력을 충분히 인식시켰다. 양국은 모두 러시아의 팽창을 우려했으며, 영국으로서는 이 지역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태에 시의적절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세력으로 일본밖에 없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의화단사건은 이같이 영·일관계가 청일전쟁 후 단순한 이해의 불충돌이라는 상태에서 우호관계로, 이제는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런 의미에서 영일동맹이 체결된 후 영국이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공사급에서 대사급으로 승격시킨 후 초대 대사로 부임한 맥도날드(Claude MacDonald)경은 “북경 공사관 구출작전은 東西의 島嶼帝國간에 공식 동맹의 씨앗을 심었다”고 평하였다.¹⁹⁾ 반면 일본은 의화단사건을 계기로 청일전쟁 후 일본의 요동반도 점령을 방해한 러시아와 독일이 여전히 일본에 적대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동경주재 러시아 무관은 인종적인 관점에서 일본군은 유럽에서 가장 약한 군대의 수준에 도달하는 데에도 수백년이 걸릴 것이라는 모욕적인 보고서를 본국에 보냈다. 독일 역시 케텔러(Klemens von Ketteler)공사의 피살을 구실로 발테르제(Alfred von Waldersee)원수를 연합군 총사령관직에 임명하지만 그는 공사관 구출을 위한 군사작전이 끝난 후인 9월 27일 천진의 大沽에 도착했다. 일본은 이를 인종주의적 편견에서 나온 하나의 모욕으로 간주하게 된다.²⁰⁾

18) Nish, *Op. cit.*(1966), p. 81.

19) Nish, *Op. cit.*(1966), p. 91.

러시아의 만주정책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정책 담당자의 성향이다. 일반적으로 외교정책은 담당자의 성향에 관계없이 국가적 목표와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을 고려하여 추진되기 때문에 일관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 시기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은 그 담당자에게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 당시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은 재무상 위테(Sergei I. Witte), 외상 람스돌프(Vladimir V. N. Lamsdorff) 등 온건파와 육군상 쿠로파트킨(Alexei N. Kuropatkin)장군, 국무담당 고문 베조브라조프(Alexander M. Bezobrazoff), 극동총독 겸 육해군 총사령관 알렉세예프(Evgenii Ivanovich Alekseev) 등 강경파로 분열되어 있었다. 물론 이들간의 대립은 본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방법론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위테는 세계전략적 차원에서 영국이나 프랑스 등 서방국가들의 팽창에 대결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도 상업적 목적의 항구가 필요한데 이것은 아시아에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같은 목표는 중국과의 우호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경제적 침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온건파들도 아시아에서 러시아의 팽창, 특히 만주의 점령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와, 의화단사건 이후 경제적 침투의 핵심인 철도의 보호라는 단기적 목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서 강경파와 일치하고 있다. 반면 온건파들은 청일전쟁 이후 동아시아 정세가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지만 여순항 점령 등 적극적인 팽창은 관련국들의 반발을 유발할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했다. 특히 한국을 두고 일본과 전쟁을 벌이는 것은 러시아의 잠재적 적대국들을 단결시킴으로써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러시아의 목표를 만주로 한정시킬 것을 주장했다. 만주의 군사적 점령은 이 지역 중국인들을 러시아로부터 등을 돌리게 할 것이며 열강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특히 일본이 한국을 점령할 것이다. 이것은 러시아가 안보상 취약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라는 약한 이웃 대신 일본이라는 강력한 세력과 대치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였으며, 이 결과 러시아는 거대한 군사비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던 것이다.²¹⁾

20) Langer, *Op. cit.*, p. 748.

Nish, *Op. cit.*(1966), p. 89.

21) 당시 러시아의 극동정책, 특히 위테의 만주경영에 대해서는 White, *Op. cit.*, 2~

반면 황제 니콜라이 2세의 총신인 쿠로파트킨 육군상은 소위 전진정책을 내세우면서 의화단사건은 만주점령은 물론 러시아의 영향력을 화북지방까지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평가했다. 또 현실적으로 의화단사건으로 러시아는 다른 열강의 반대가 없는 가운데 군대를 만주와 중국본토에 파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의화단사건은 강경파들이 득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성공은 강경파들이 위태의 점진적 접근법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북경공사관의 포위나 해방을 위한 군사작전보다는 만주에 관심을 기울인다. 즉 강경파들은 의화단사건을 만주에 대한 영향력의 확대라는 수준을 넘어 군사적으로 이를 장악, 중국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의화단의 북경공사관 포위공격이 절정을 이루던 1900년 7월 이후 10월까지 철도보호라는 명목으로 대병력을 파견, 만주 전역을 점령했다. 물론 러시아는 공식 성명을 통해 ‘군대파견에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으며’, 상황이 정상으로 회복되면 만주를 중국에게 돌려주고 철병할 것이며, 또 만주에서 열강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시 이름을 러시아식으로 변경하고 철도와 관계없는 도시도 공격하는 등 만주의 영구점령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었다.²²⁾

러시아 정책 담당자들 간의 분열은 의화단사건의 처리에서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일본과의 전쟁으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러시아는 의화단사건의 처리를 위해 1900년 8월 25일 제1차 통첩문이 북경의 각국 공사관에 전달했다. 그 내용은 연합국들 간에 공동행동을 유지하고 중국의 政體를 보존함으로써 중국의 분할을 배제한다는 온건한 내용이었다. 또 러시아 군대의 철수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통첩문은 러시아 정부내에서 위태와 람스돌프외상 등 온건파의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만주 주둔 러시아군이 만주점령을 기정사실화 하는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외교 역시 이같은

4장 참조.

22) 강경파는 이제 만주가 ‘제2의 부하라’(a second Bukhara, Turkistan 지역으로 러시아령)가 될 것이라는 공언을 서슴치 않았다(Langer, *Op. cit.*, p. 695 및 金景昌, 《동양 외교사》, 박문당, 1982, 500쪽).

방향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해 11월 극동군 총사령관 알렉세에프는 奉天 장군 增祺(Tseng Chi)에게 중국군의 무장해제, 러시아군의 봉천 주둔, 중국이 러시아군을 위한 식사 및 식량 공급, 러시아 관무관의 봉천 주재 허용 등, 러시아가 만주에서 군사, 행정적 실권을 갖는 내용인 ‘여순협정’을 제시했다. 이어 다음해 2월에는 중국에게 12개조 요구를 제시했다. 이것은 사실상 러시아가 만주를 보호령화 하려는 것으로, 1915년 제1차 세계대전 중 일본에 중국 원세개 정부에 제시한 21개조 요구와 같이 악명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러시아는 12개조 요구에서 만주를 중국에 반환, 행정을 회복시킨다는 전제를 제시하지만, 러시아가 만주지역의 질서를 회복하고 중국이 군비 배상만이 아니라 철도·인명·재산 손실을 보상하고 동만주철도와 북경을 연결하는 철도부설권을 허용할 때까지 군대를 주둔한다는 것 등 중국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침략을 노골화하는 것이었다. 페트로그라드에서는 외상 람스돌프가 중국공사에게 이 문제가 3월 16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러시아는 이 제안을 철회하고 자유행동을 취하겠다는 최후통첩적인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²³⁾

러시아의 정책은 이후 ‘극동위기’로 불리는 일련의 사태로 전개되었으며 결국 러일전쟁으로 이어졌다. 중국은 러시아의 요구가 강압적이고 지나친 것이며, 또 열강들이 러시아의 요구에 반대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여순협정은 지방관리가 중앙의 승인없이 조인한 것이라는 구실아래 비준을 거부했다. 영국·일본·미국·독일 등 열강들은 러시아의 만주점령을 의화단사건으로 야기된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정부와 열강간에 의화단사건을 종결하는 ‘의화단 의정서’에 포괄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개별 협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러시아의 제안에 강력히 반대했다. 더구나 러시아의 요구는 서방국가들이 중국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문호개방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었다. 열강들은 또 철군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러시아의 선언과도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 군대를 만주에서 철수시킬 것을 요구했다.

열강들의 반러시아 전선은 이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지만, 특히 영국

23) 이 시기 만주문제를 두고 러시아와 중국 및 열강들의 협상에 관해서는 金景昌, 위의 책, 505~519쪽 ; Nish, *Op. cit.*(1985), 5~7장 참조.

과 일본은 러시아의 요구가 자국의 이해를 직접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주도했다. 일본이 1901년 1월 러시아의 만주철병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중국에게도 만주를 러시아에 할양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1901년 10월 이홍장이 러시아와의 협정안에 조속히 동의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일본은 ‘조인전에 반드시 일본정부와 협의’한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또 러시아정부에 대해서는 러·중협정이 ‘타국의 조상상 권리나 이익을 훼손하는 어떤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해 2월에는 중국이 러시아에 양보하면 열강도 중국에게 영토 할양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 경고했다. 영국·미국·독일도 일본과 보조를 맞추어 중국에게 러시아와의 협정에 조인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열강들의 이같은 반러시아 전선은 1902년 1월 30일 영·일 양국이 동맹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러시아는 만주문제가 중·러간의 쌍무적인 성격이며, 또 중국이 독립국이므로 타국과의 조약은 자유라는 점을 들어 국제적 압력에 대응했다. 그러나 국제정치의 구조적 관점에서 중국대륙에서 열강들 간의 세력균형이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는 상황이므로 러시아 세력의 신장은 곧바로 다른 열강들의 권익을 침해로 이어진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다. 즉 열강들은 일차적으로 러시아가 새로운 권익을 획득하는 데 반대할 것이며, 중국이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하면 동일한 권익을 중국에 요구할 것이다. 중국은 열강들의 지원을 확신하고 1901년 4월 5일 러시아와의 교섭을 중단하며, 러시아도 결국 요구를 철회, 1902년 4월 8일 양국은 만주환부에 관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그 내용은 만주에 대한 통치와 행정을 중국에 반환할 것과 러시아 군대의 철군 기한을 원래 3년에서 1년 반으로, 그리고 6개월 이내에 봉천성 서남부 요하에 이르는 지방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철도를 반환하며, 각 성의 군대는 그 다음 6개월마다 단계적으로 철수한다는 것이었다.²⁴⁾

러시아는 이 협정에 따라 1902년 10월 8일 1차철병은 이행했으나 6개월 후인 다음해 4월 8일로 예정된 2차철병은 이행하지 않고 러시아군을 오히려

24) 金景昌, 위의 책, 514쪽. 그동안 친러시아 정책을 취해온 이홍장이 1901년 11월 17일 사망한 것도 러시아의 입장을 약화시킨 한 요인이었다.

압록강 대안, 봉황성, 안동 지역으로 남하시켰다. 더구나 만주의 중심 도시인 奉天에서는 러시아군이 거짓 철수시켰다가 회군하고, 牛莊에서는 道臺(군수)를 억류해두고 행정 책임자가 없다는 구실로 철수를 거부하는 등 협정을 이행할 의도가 없음을 보였다. 이어 러시아는 만주에 대한 독점권과 몽고에 대한 간섭권을 의미하는 새로운 요구를 7개조(4월)·4개조·5개조(9월) 등의 형식으로 중국측에 제시했다. 문제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러시아의 요구조건이 아니라 이 시기 소위 ‘신노선’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이 결정적으로 강경 방향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국무상 베조브라조프와 니콜라이 황제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 노선은 만주의 정치적·군사적 요충에서 러시아 기업을 지원하며 외국기업은 제거할 것, 이 지역의 방어능력을 재정 부담에 관계없이 정치적·경제적 이해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대함으로써 다른 열강에게 만주를 영향권으로 만들겠다는 (따라서 열강들의 이해를 제거하겠다는) 러시아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신노선의 대두는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에서 중요시되지 않는 압록강 유역의 이권과 관련하여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문제가 최소한 러일전쟁의 촉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²⁵⁾ 러시아 황제는 이같은 내용은 1903년 5월 15일 동아시아 문제를 총괄하는 알렉세예프장군에게 지시했다.

이어 7월에는 여순항에서 알렉세예프를 비롯하여 베조프라조프, 육군상 쿠로파트킨, 중국주재공사 레사르(Paval M. Lessar), 주한공사 파블로프(A. I. Pavlov) 등 현지관리들이 참석하여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을 논의했다. 놀랍게도 이 회의는 온건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즉 한국의 전부는 물론이고 북부 지방의 점령도, 압록강 유역에서 전개하는 활발한 활동도 러시아가 한반도 북부를 탈취하려는 의구심을 일본에게 줄 것이며, 북만주 지역의 병탄도 난관이 많을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도 막대하다는 점에서 기본정책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회의는 동아시아 정책을 담당하는 인사들이 모였지만 이들간의 견해 차이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종결됨으로써

25) Malozemoff, *Op. cit.*, pp. 177ff.

앞으로 정책목표와 이를 추진하는 방식에서 불확실성과 혼란만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²⁶⁾

여순회의 후 러시아는 만주에서 3차철병을 이행하지 않았다. 러시아측의 설명은 철병문제는 외교부의 권한이 아니라 새로이 임명된 알렉세예프 극동총독의 권한이며, 극동총독은 황제에 직속되기 때문에 외교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 한국에서 龍岩浦사건을 유발했다. 러시아는 한국 정부와 벌목 계약이란 명목으로 러시아군을 벌목공으로, 병기를 벌목장비로 가장하여 압록강을 건너 한반도로 진주시키고 한국정부에 용암포의租借를 요구했다(러시아는 결국 한국정부를 강압하여 1903년 8월 23일 용암포 조차에 성공한다). 일본은 영국의 지원아래 한국정부에 대해 러시아가 용암포를 조차하면 일본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적합한 의주의 개항을 요구했다. 극동위기는 이같이 만주와 한반도를 포괄하여 일본·러시아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심화되어 갔다.

4) 영일동맹과 러일협상

러시아의 팽창주의적 정책은 결국 동아시아에서 영국과 일본 양국이 동맹 관계를 형성하게 만들었다. 동맹이란 국제정치상 갈등·협조로 이루어지는 연장선상에서 협조의 최고 형태이다. 동맹국들은 공통된 이익을 위협하는 가상적국을 상정하고 이에 공동으로 대항한다. 따라서 영일동맹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여전히 최대의 해군국이며 또 상업세력인 영국과 이 지역에서 새로이 대두한 일본이란 지역세력이 러시아에 대항한다는 공통된 이익기반을 발견하고 협조관계를 공식화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일동맹은 이후 20년 동안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국제관계를 지배하는 중요한 축으로 기능하게 된다. 본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영일동맹의 결성 자체와 양국간에 동맹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러일전쟁의 발발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26) 베조프라조프의 등장과 위테의 권력 약화, 그리고 ‘신노선’에 대해서는 *Ibid.*, pp. 177~227 ; Nish(1985), pp. 170~174 ; 金景昌, 앞의 책, 516~517쪽 참조.

영일동맹은 동아시아 국제정치뿐만이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영일동맹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에게는 여전히 유럽의 열강관계에서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었다. 즉 영국은 일본과의 동맹을 맺음으로써 러시아가 동아시아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해상세력에의 야망을 영원히 포기할 것’을 기대했다.²⁷⁾ 영국의 의도는 1907년 8월 영·러협정과 연이은 영국·프랑스·러시아의 3국협상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영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었다는 사실 자체가 유럽우선주의라는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영국이 동아시아 문제에 계속 개입하게 만들었다.

둘째, 영국이 일본을 동반자로 선택한 것은 청일전쟁 이후 이 지역에서 양국간의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지만, 그 기초가 된 것은 일본의 군사력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영국은 의화단사건 등을 통해 일본의 군사력을 높이 평가했다. 일본의 군비증강은 청일전쟁 이후 급속도로 진행되어 육군 병력은 평상시는 17만, 전시 60만으로, 군사예산은 1895년 11,000,000엔에서 1900년에는 60,000,000엔으로, 그리고 해군은 1896년~1904년까지 4배 증강하여 당시 최대인 15,000톤급 전함 4척 및 수 척의 순양함·구축함을 건조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일본이 군사력 전반의 증강만이 아니라 독자적인 해군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영국은 일본의 해군능력을 동아시아에서 러시아만이 아니라 프랑스·독일 등 모든 잠재적 적대국들로부터 영제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시한다.²⁸⁾

그러나 양국간의 협력 가능성은 구체적 사안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영국의 이익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 20세기초 영국은 동아시아 무역에서 과거와 같은 절대적인 지위는 잃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다른 열강들을 압도할 만한 능력을 보유했으며, 청일전쟁 후 러시아와의 대결 과정에서 중국정부가 양자강 유역의

27) Nish, *Op. cit.*(1966), p. 245.

28) 특히 이 지역에서 영국의 이권을 보호하는 영국해군은 일본해군이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이 지역 해군정책을 지배할 것이라고 평가하게 되었다(*Ibid.*, pp. 174~177·213; Langer, *Op. cit.*, pp. 405·690).

불양도 선언을 하게 만들음으로써 중국의 경제적 중심부를 영국의 영향권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다르다. 청일전쟁으로 요동반도·대만을 획득했지만 3국간섭으로 요동반도는 반환하고 대만만을 보유할 뿐이었다. 한반도에서는 일본의 영향력, 특히 경제적 영향력은 증대되고 있었으나 국제적으로 어떠한 지위도 승인받지 않은 상황이었다. 더구나 만주는 일본의 ‘영향권’ 밖에 존재했다.

이것은 일본이 그들의 이익범위와 혹은 당시 제국주의 열강들의 기존 영향권을 인정할 때에만 동맹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동아시아에서 잠재적인 팽창세력인 일본이 이 범위를 벗어나 팽창하려 할 경우에도 영국이 과연 양국의 협력기반이 존재한다고 평가할 것인지는 의문시되는 것이다. 물론 일본의 팽창이 영국의 영향권과 충돌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영국이 이같은 공간으로 일본의 세력을 유도할 수 있다면, 또 이 지역에서 일본이 영국의 이익, 특히 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영국이 일본을 관리할 수 있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라는 제한된 지역에서 이같은 공간은 별로 존재하지 않았다. 더구나 국제정치적으로 힘이란 비어 있거나 약한 곳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다. 만약 영국의 영향권에서 영국의 장악력이 약화되고, 따라서 영국의 일본 관리능력이 쇠퇴한다면 아무리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일본의 팽창은 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것은 러일전쟁 후 현실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02년이란 시점에서 양국은 이같은 이론적인 문제는 접어두고 당시 전개되고 있던 범세계·동아시아의 국제정세에 비추어 군사동맹을 결성하였던 것이다.

영일동맹을 평가할 때 일본과 영국 중 어느 쪽이 더 적극적이었느냐 혹은 어느 쪽이 이득을 보게 되었느냐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어느 국가든지 타국과 동맹관계에 들어갈 때는 자국에게 유리한 면에 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한다. 당시 양국은 모두 안보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독일은 1898년부터 1차해군계획(연안 경비용)과 2차계획(1899, 대양 작전용)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해군력 건설에 착수했다. 영국은 자국의 안보를 거의 전적으로 해군력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독일의 계획은 위협적인 것이었다. 영국의 관점에서 더욱 불안했던 것은 독일이 단독으로 영국의 해군에 대항한다는

전략이 아니라 영국이 유럽 대륙국가들을 상대로 전통적으로 추구해 온 세력균형 전략을 독일이 해군력 경쟁에서 재현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독일은 영국에 대항할 수 있는 핵심 해군력을 일단 건설하면 지난 수세기 동안 영국의 해양지배에 반대해 온 다른 대륙국가들이 협력하여 영국해군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대륙국가들의 해군동맹이 성립될 것으로 보았다. 독일의 적대국인 프랑스의 관점에서 보면 독일의 위협은 해군력이 아니라 육군이라는 점에서 독일의 전략은 공허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은 독일의 계획에 대항하여 세계 도처에 산재한 영국해군을 본국 주변해역으로 재배치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은 영일동맹에 힘입어 동아시아 지역에서 동맹 직전인 1901년 전함과 순양함을 합쳐 38척이었던 것을 1910년에는 그 절반으로 축소하였으며²⁹⁾ 1905년 이후에는 태평양에서 영국의 해군력을 완전히 철수하면서 이 해역을 미국에게 맡겨버렸다.³⁰⁾

반면 영국은 일본에 대해 동아시아 정책의 동반자라는 필요성과 함께 불신·불안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일본은 명치유신 이래 국내적 성장과 대외적 팽창에 주력하고 있어 언제인가는 동아시아에서 영국의 지위에 도전할 것이라고 의심했던 것이다. 또 일본 국내에 반외감정이 여전히 존재하였으며, 이것이 부활될 우려도 있었다. 영국의 대일본정책은 기본적으로 불평등조약에 의해 획득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인데, 청일전쟁 직전인 1894년 일본의 요구에 따라 불평등조약을 개정한 것도 반외감정의 무마를 위한 측면이 강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900년이 되면 동아시아에서는 이미 유럽에서 동맹관계에 들어간 러시아·프랑스의 해군력과 영국·일본의 해군력이 균형을 이루는 상황이었으므로 일본과의 동맹은 필연적인 귀결로 보았다. 이것은 영국에게 관한 한 동맹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영국의 해군력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점이며, 대러시아 관계는 부차적인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 외에도 일본의 근대화는 당시 영국사회를 지배하던 실용주의, 경제적 자

29) Lowe, Peter, Great Britain and Japan 1911~15, *A Study of British Far Eastern Policy*(London : Macmillan, 1969), pp. 17~18.

30) Nish, Ian H., *Alliance in Decline—a Study in Anglo-Japanese Relations 1908~23*(London : Athlone, 1972), pp. 22~27 · 45~47.

유방임주의 정신의 성공적인 적용이라는 일종의 도덕적인 측면에서 일본을 찬양하는 분위기도 일조를 했다고 하겠다.

영국에 비해 일본의 입장은 단순한 것이었다. 일본에게는 3국간섭으로 요동반도를 반환한 후 유럽 열강들과의 관계에서 ‘고립’의 탈피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일본외교의 지속적인 관심사인 이 문제는 백인국가들이 단결하여 일본에 대항할 때 일본의 안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소극적인 문제에서부터 백인국가들과의 우호적 관계를 통해 일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적극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3국간섭과 같은 사례 이외에도 미국과 유럽 열강들이 대중국 무역에서도 단결하면 일본은 제외될 가능성이 존재했던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유럽 열강 중 일국, 특히 동아시아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국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일본은 이 딜레마를 궁극적으로 해상세력인 동시에 19세기 후반 동아시아 정치의 주요 세력인 영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외에도 일본은 영국이 산업혁명의 선도국으로 철도·해군함정의 설계 등에서 선진기술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었다.³¹⁾

이같은 상황에서 양국은 1901년 4월 동맹체결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하여 다음해 1월 30일 동맹조약을 체결하였다.³²⁾ 그 주역은 런던주재 일본공사 하야시 타다수(林董)와 영국외상 렌즈다운(Henry, fifth Marquess Lansdowne, 1900년~1905년간 외상 역임)이었다.³³⁾ 그러나 영일동맹은 양국만의 쌍무적인 문제

31) 영일동맹에 임하는 양국의 입장에 관해서는, Nish, *Op. cit.*(1966), pp.8ff, 특히 p.36. 일본 역시 영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친중국적이며, 도서국가인 일본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은 북방의 러시아와 함께 해상세력인 영국이라는 점 등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32) 여기에서 ‘공식적’을 강조한 것은 청일전쟁을 전후하여 열강들간에는 동아시아 문제를 두고 각종 동맹의 가능성이 거론되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영국과 중국의 동맹은 세계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가들간의 동맹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서부터 러시아에 대항하여 영국·중국·독일간의 동맹, 혹은 미국을 포함하는 안, 그리고 일본이 원했던 영국·독일·일본간의 동맹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논의들은 이를 제기한 각국에게는 일종의 정책건의(policy recommendation)에 해당하겠지만, 각국의 정책목표나 정책수행 능력, 그리고 동아시아 정책에서 나타나는 전통 등을 무시한 것으로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었다. 영일동맹도 초기에는 이같은 탐색 과정을 거치고 있다.

로 한정될 수 없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동맹이 최종적으로 타결되기까지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에서 양국의 이해 범위 및 러시아와의 관계였다. 일본의 관점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의 이해가 영국에 비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영국이 보유한 이해는 주로 상업적 성격인데 비해 일본의 이해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정치적·전략적 성격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동맹이 실제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한국 문제의 처리와 직결되는 것이었다. 러시아 문제도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양국은 모두 러시아를 가상 적국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했다. 영국과 러시아는 지중해(흑해 해협) 문제에서부터 중동, 인도 국경, 동아시아에 걸쳐 대립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영일동맹은, 성사된다면, 동아시아 지역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일본의 이해가 동아시아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또 러·일간의 문제도 이 지역에 국한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영일동맹에 임하는 양국의 입장은 국제정치에서 루소(J. J. Rousseau)의 사슴 이야기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굶주린 사람 몇 명이 서로 ‘협력’하여 사슴 한 마리를 잡아먹자는 데 ‘합의’한다. 그러나 한 사람이 사슴을 잡기 위해 협력하는 도중에 지나가는 토끼 한 마리를 잡아 굶주림을 매운다. 이 사람이 토끼를 잡는 사이 사슴은 포위망을 뚫고 도망해 버린다. 이 우화는 국제정치에서 국가들이 동일한 이해를 갖고 있지만 개별 국가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협력이 어렵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³⁴⁾ 영국과 일본은 러시아를 두고 ‘협력’할 태세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양국은 러시아와의 분쟁지역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양해에 도달하면 협력의 필요성은 사라지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가 특히 이에 해당하였다. 즉 영국은 세계 도처에서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지만 러·일간의 대립지역은 만주와 한국 등 동아시아에 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일본은 러시아와 타협할 수 있다면 러시아의 불만을 야기시킬 영국과의 동맹을 체결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

33) 하야시의 동맹교섭에 관해서는 Pooley, A. M.(ed.), *The Secret Memoirs of Count Tadasu Hayashi*(London: G. P. Putnam's Sons, 1915; 申福龍·羅洪柱 역주, 《林董 비밀회고록》, 건국대 출판부, 1989) 참조.

34) Lieber, Robert J., *Theory and World Politics*(구대열 역, 《현대 국제정치 이론》, 학문과 사상사, 1987, 153쪽).

것이 영·일 양국이 동맹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마지막까지 러시아와의 타협을 모색하게 되었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양국간의 협상과정을 그 중요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협상과정에서 제기되는 일본의 원로, 특히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등의 간여에 관한 것이다. 명치시대 일본 정치의 특수한 형태인 원로들은 천황과 수상의 자문에 응하는 일종의 초헌법적인 기관으로 영일동맹과 같은 중대한 외교적 문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들은 1901년 동경정부가 런던주재대사 하야시에게 영국 외무성을 상대로 동맹교섭을 시작할 것을 승인하는 시기부터 이 문제에 간여했다. 이토는 런던과 동경간에 협의가 본궤도에 오른 이후에도 러시아와의 타협 가능성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12월 페트로그라드를 방문하여 러시아 지도자들과 한국과 만주를 교환한다는 소위 韓滿교환으로 알려진 협상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여전히 한국에서 일본의 권익을 제한하려는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러시아와의 타협은 실패하였고 영국과의 동맹이 결실을 맺게 되었던 것이다.³⁵⁾ 이토의 개인적 외교행각은 성과가 없었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러시아에 제기한 문제들은 러일전쟁 직전 양국간에 진행된 한만교환, 포츠머스조약의 한국조항의 주요 쟁점 등이라는 점에서 러일전쟁의 핵심적인 쟁점들이 이미 표면화되었다는 것이다. 이토의 외교는 또 곧 서술하는 바와 같이, 한국문제에 있어 일본의 요구가 완강한 것이라는 점을 영국정부에 인식시킴으로써 영일동맹 협상과정에서 영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데 기여했다고 할 것이다.

그 다음, 영일동맹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핵심적인 논쟁점에 관한 것이다. 이 문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일 양국의 기본 외교정책 목표를 반영하는 것으로 한국의 장래와도 직결되는 것이다. 양측은 1901년 11~12월 간 동맹조약 초안을 상호 교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동맹의 범위,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요구, 동아시아에서 해군력 수준 등의 문제를 두고 대립하게 되었다. 양측은 동맹의 성격을 방어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데는 쉽게 합의했다.

35) 당시 이토의 개인적 외교행위에 대해서는 Nish, *Op. cit.*(1966), pp. 185~203 및 金景昌, 앞의 책, 525~528쪽 참조.

즉 동맹 일국이 전쟁에 돌입하면 다른 동맹국은 중립을 지키며, 제3국이 적국을 지원할 때는 다른 동맹국도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은 동아시아에서 영국이 양자강 유역에서 보유한 이해에 비해 일본이 한국에서 보유한 이해는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동맹의 범위를 동남아 지역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다. 즉 양자강 유역의 영국 이권은 공동적이고 또 다른 열강에게도 어느 정도 열려 있던 것이지만 한국에서 일본의 이해는 구체적인 것이었다. 영국은 공동의 이해를 두고 일본의 보장을 받는 대신 일본의 구체적 이해를 보장한다는 것은 손해가 되는 거래라는 것이다. 일본과의 동맹으로 영국이 전쟁에 휩쓸리게 된다면 영국의 적국은 러시아와 러시아의 동맹국인 프랑스가 될 것이다. 전쟁 지역은 주로 동아시아가 되겠지만 영국의 戰域은 영불해협·지중해, 그리고 인도국경 지역까지 확대될 수도 있었다. 이것은 일본에 비해 영국의 부담이 훨씬 크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동맹의 범위를 동아시아 외부로 확대하는 것이 불합리한 주장이 아니라는 논리였다. 특히 육군성과 인도 담당성은 내각에서 영국측 초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페르샤와 아프간 국경에서 러시아의 압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동맹의 범위를 인도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양자강 유역이 한국에 대한 대가로서 충분한 것이며, 이 지역이 당시로서는 안정되어 있지만 언제 난관이 제기될지 모른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영국이 일본의 양보를 강요하지 않음으로써 동맹의 범위는 ‘극동’으로 한정되었다.

두번째 문제점은 일본이 한반도에서 그들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데 영국이 동의하라는 일본의 요구에 관한 것이다. 영국은 앞서 언급한 이유에서 일본의 요구를 무시하고 영국측 초안에서 ‘한국의 독립’만을 언급했다. 그러나 일본은 수정안에서 ‘일본은 제3국이 한국의 영토 일부를 점령하는 것을 방지할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영국은 이 조항은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침탈을 문제삼아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것’이며, 또 이로 인하여 일본의 자의대로 개시한, 특히 영국에게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지역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한 것이다. 랜즈다운은 일본이 ‘매우 충분한 이유가 없으면 가벼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하야시의 보장에 만족하지 않으면서, 영국은 일본

의 앞잡이가 될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것은 청일전쟁 때부터 한반도에서 일본의 팽창주의를 인지하기 시작한 영국으로서는 일본의 요구는 어떠한 명분을 붙이든 팽창주의일 뿐이며 영국이 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밝힌 것이었다. 즉 한반도 문제를 두고 일본에게 백지수표나 다른 없는 재량권을 주는 것은 일본이 침략자인 경우에도 영국이 일본을 지원하여 러시아와 프랑스와 싸워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공동으로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은 영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혼란은 항상 갑자기 일어난다. 그리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영국과 상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영국은 한국에서 일본의 재량권을 승인한다고 해서 한반도에서 일본의 침략적 성향을 고무한다는 우려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일본의 요지였다. 영국은 물론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요구는 일본이 영일동맹을 체결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타협안을 제시하였다. ‘일본은 한반도에서 침략적 의도가 없음을 천명한다. 영국은 일본이 한국에서 정치상·상공업상 특별한 이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영국은 또 일본이 제3국의 침략적 행위로 인하여 한국에서 일본의 이해가 위협받을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로써 영국은 한반도에서 분쟁으로 인하여 전쟁에 불필요하게 휘말리지 않는다는 보장을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마지막 논쟁점은 동아시아에서 해군력 수준이었다. 동아시아에서 영국의 군사력이란 주로 해군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문제는 영국의 관점에서는 동맹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영국은 일본과의 동맹을 통해 1902년 러시아와 프랑스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보유한 전함 9척에 비해 전함 12척을 유지하며, 그 외 순양함도 수적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영해군성은 일본과의 동맹은 영국이 동아시아에서 해군력을 증강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는 영국함대를 철수시켜 유럽에서 독일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평화시 양 해군간의 협조와 전시 해군시설의 상호이용’은 영국이 홍콩에 새로운 해군선착장이나 석탄저장소를 건설할 필요도 줄어드는 것

이었다. 영국은 이같은 계산에서 동맹 양국이 유지해야 할 함정의 수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평화시 함정의 수리와 석탄보급 등 상호협조만을 규정하려 했다. 그러나 일본으로서는 함정의 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원했다. 일본 해군성은 영국이 이 조약을 이용하여 해군력을 동아시아에서 철수시킬 경우 일본은 러시아만이 아니라 프랑스·독일의 해군력을 상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초안은 이 조항을 더욱 엄격하게 ‘각 동맹국은 극동에서 3국의 극동함대 중 가장 강력한 함대보다 더 강력한 함대를 유지’할 것을 규정했다. 즉 영국과 일본 모두 러시아의 극동함대보다 강력한 함대를 보유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영국은 자신의 해군력을 어느 지역에 어느 수준으로 배치할 것을 강요하는 조항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또 남아프리카·유럽 등에 수많은 공약을 하고 있던 영국으로서는 중국해에 일정한 해군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동맹 체결후 일본이 영국의 해군력 지원이 불만이라고 판단하면 5년이 지난후 언제든지 동맹을 종결시켜도 좋다고 통고했다. 이에 일본은 ‘동맹 양국이 가능한 한 제3국의 해군력에 비해 우월한 해군력을 유지하는 데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선으로 양보한다. 영해군성은 ‘가능한 한’이라는 구절에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우월한 해군력’이란 중국해에 주둔한 모든 종류의 함정을 총합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일본은 영국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 조항은 비밀로 남겨졌기 때문에 이후 공개적 논쟁을 일으키지는 않았다.³⁶⁾

양국은 이상의 문제들에 대해 약 2개월간 힘든 협상을 끝내고 1902년 1월 30일 동맹조약에 서명했다. 영국으로서는 당시 가장 절실한 해군력 협조를 일본을 통해 확보하며, 일본은 영국의 완전한 동의는 아니라 할지라도 한반도에서 일본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동아시아 국제정치에서 더욱 중요한 점은 동맹조약에 힘입어 일본이 만주 및 한국문제를 두고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만주와 한국문제를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간의 마지막 협상은 1903년 7월 이후 전개되었다. 일본으로서는 러시아가 강경책으로 이 지역에서 그들의 지

36) Nish, *Op. cit.*(1966), pp. 181~183·211~219.

위를 공고화함에 따라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지할 수 없다는 긴박감으로 느껴졌던 것이다. 러시아 주재 일본공사 쿠로니(栗野愼一郎)는 8월 12일 람스돌프 외상에게 다음과 같은 6개항의 협상 기초안을 제시한다. 중국과 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 그리고 상공업상의 기회균등(1조), 러시아는 한국에서 일본의 우월한 이익을 승인하고 일본은 만주에서 철도경영에 대한 러시아의 특수이익을 승인할 것(2조), 한국의 철도를 만주 남부로 연장하는 일본의 권리를 러시아가 방해하지 않을 것(3조), 양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또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일본은 한국에, 러시아는 만주에 군대를 파견할 경우 필요 이상 초과하지 않으며 이 군대는 임무가 끝나는 대로 즉시 소환한다(2·4조), 한국의 개혁을 위해 일본은 군사원조를 포함한 지원과 조언을 줄 수 있는 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러시아가 승인한다(5조).

흔히들 ‘韓滿교환’으로 알려진 일본안은 그 내용상 일본은 한국을 거의 완전히 장악하지만 만주에서 러시아의 권익은 상업상의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1903년의 한만교환은 영일동맹이 체결되기 직전인 1901년 12월 이토가 페트로그라드에서 러시아 지도자들에게 제시한 것과는 다른 것이다. 당시 이토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인 권리를 러시아가 인정하면 만주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권리를 인정할 것을 보장했다. 그는 위테에게 러시아가 한국에서 상업·정치·군사상의 권리를 일본에게 일임한다면 일본은 러시아가 우려하는 한국의 독립과 대한해협을 통행 등을 보장하고 한국을 러시아에 대한 전략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의했다. 즉 1903년의 협상안은 그 동안 일본이 영일동맹과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크게 증대시켰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었다.

물론 러시아는 일본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10월 3일에 로젠(Romanivich R. Rosen)공사를 통해 고무라(小村壽太郎)외상에게 러시아의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이 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약속한다(1조)는 전제 아래, 러시아는 일본이 한반도에서 우월한 이익을 승인하고 한국의 民政을 개량하는 조언과 원조의 권리를 승인하며 일본의 상공업적 기업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승인한다(2·3조). 그러나 러시아는 일본이 한국에 군대를 파견할 때는 러시아측에 알릴 것이며 군대는 임무가 끝

나는 대로 즉시 소환하며(4조), 한국 영토의 일부라도 군사상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것과 대한해협을 자유통행을 방해하는 시설을 한국해안에 설치하지 않을 것(5조), 북위 39도 이북의 한국영토는 중립지대로 설정하여 러·일 양국이 모두 군대를 넣지 않으며(6조), 만주 및 그 연안은 전혀 일본의 이익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일본이 승인한다(7조). 이것은 일본안과는 정반대 되는 입장에서 만주는 러시아의 독점적인 권익 범위내에 넣는 대신 한국에 대한 일본의 권익을 제한적인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일본과 러시아는 이같이 한국과 만주를 양국의 이익범위로 인정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은 절대적인 것으로, 상대방의 이익은 제한적인 것으로 설정하려 했다. 양측은 1903년말까지 협상을 계속하지만 타협의 여지는 줄어들었다. 1904년 1월 6일 전달된 러시아의 최종안도 별다른 양보를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중국과의 조약으로 러시아가 만주에서 획득한 권익을 일본이 방해하지 않을 것, 그리고 일본의 거류지 설치 금지를 요구하는 등 더욱 강화된 것이었다. 더구나 한반도에서 일본의 권익을 여전히 경제적인 것으로 한정하고 한국정부에 대한 일본의 행동권을 행정개혁을 위한 조언과 원조로 한정하며 군사적인 것은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협상에 의한 타협의 여지를 사실상 소멸시켰다. 고무라외상도 1월 13일 로젠공사에게 일본의 최종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일본은 만주와 그 연안이 일본의 이익범위 밖이며, 한국과 그 연안이 러시아의 이익범위 밖이라는 점을 상호 승인할 것을 요구했다. 그 다음 일본은 러시아가 만주의 영토보전을 존중하고 일본 및 열강들이 중국과 맺은 조약으로 만주에서 획득한 권익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러시아가 요구한 한국에서 군사적 시설의 설치금지, 39도 이북의 중립지대 설치, 만주 거류지 설치금지 등을 삭제해 버렸다. 일본은 2월 2일까지 러시아 정부의 회답을 요구했으나 러시아가 이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2월 6일 국교 단절과 독자행동을 통첩하기에 이른다.³⁷⁾

37) 러일간의 협상과정에는 관해서는 Kajima, Morinosuke, *The Diplomacy of Japan 1894~1922*(Tokyo: Kajima Institute of International Peace, 1976), Vol. II, pp. 97~117; Nish, *Op. cit.*(1985), 12~14장; White, *Op. cit.*, 6장; 金景昌, 앞의 책, 531~533쪽 등 참조.

이 시기 러·일간의 협상과 함께 전쟁을 피하기 위한 관련 열강들의 외교적 노력도 간단히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양국과 동맹관계에 있던 프랑스와 영국은 러·일 양국에게 조정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일본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1903년 10월 람스돌프 러시아 외상이 파리를 방문한 후 프랑스의 델까세(Theophile Delcassé) 외상은 러·일간에 거중조정이나 중재를 담당하려는 의사가 있음을 영국과 일본에게 표명했다. 그러나 일본은 전쟁을 지연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군사력을 증강하는 데 도움을 줄뿐이라는 관점에서 거부했다. 영국은 일본의 요구 중 일부는 합리적일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모든 결정을 동맹국인 일본에게 일임하고 있었으므로 일본이 요구하지 않는 중재에 나서지 않겠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더구나 일본이 영국의 압력으로 요구조건을 수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전쟁이 시작되기 약 1개월 전인 1904년 1월 13일에도 델까세는 프랑스가 러시아에 엄청난 규모의 차관을 제공했으므로 평화의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모토노 이치로(本野一郎) 일본대사를 설득했지만, 일본은 한반도를 일본의 전략적 목표에 이용하는 데 러시아가 억제력을 행사하는 조건을 내세우는 한 타협의 여지는 없다고 이를 거부했다.³⁸⁾ 즉 이미 이 단계에서 일본은 프랑스의 설득이나 영국의 관리범위에서 벗어나 독자행동을 취하고 있었다.

그 다음 일본이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택하게 된 이유를 간단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추구한 목표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청일전쟁 이후 일본과 러시아간의 관계는 주로 한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만주는 사실상 일본의 이해 영역밖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의화단사건 이후 러시아의 만주점령을 계기로 일본은 러시아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는 열강들의 연대에서 선봉을 담당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만약 1901년 이토가 추진했던 한만교환이 이루어졌다면 일본은 한반도를 장악하는 것만으로 만족했을까. 만약 그렇다면 1903년 후반기에 러시아에 제시한 협상 기초안 중 만주에서 러시아의 이익을 제한한 조항들은 양보에 대비한 협상용이라고 할 수 있다.

38) White, *Op. cit.*, pp. 124~126.

Nish, *Op. cit.*(1966), p. 281.

그러나 이 시기 일본은 만주에서 러시아의 권익, 특히 정치적 의미를 갖는 권익은 집요하게 제한하려 했다. 만주에서 중국의 주권을 승인하며 러시아의 권익을 철도 등 상업적인 것으로 한정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의화단 사건 이후 만주문제가 전략적인 관점에서 한국문제와 분리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일본이 인식했기 때문이다. 즉 한국에서 일본의 이익을 승인 받는 대신 (이 점에 있어서도 러시아는 일본의 이익을 상업적인 것 이상으로 승인하지 않았다.) 만주에서 러시아의 재량권을 모든 분야에서 승인한다면 만주는 사실상 러시아의 영토가 될 것이며, 이 결과 수년 내에 러시아는 한반도를 대상으로 팽창을 시도하여 한국은 또다시 러·일간에 분쟁의 대상이 될 것이다. 즉 일본의 관점에서는 만주와 한국문제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만주로부터 완전한 이익의 철회는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이것은 일본의 관점에서 볼 때 한만문제에 대한 일본의 요구를 러시아가 수용해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이런 관점에서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은 한반도만이 아니라 만주에 있어서도 일정한 이익의 확보와 러시아의 축출 혹은 행동제한이었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전쟁을 촉발할 때 승리를 확신했느냐 하는 점이다. 1903년 후반기 러시아와의 전쟁이 불가피하게 상황이 조성되면서 일본 군부는 이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하였다. 결론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조기에 치르는 것이 일본에게 유리하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영국 및 미국과 연합하여 러시아를 만주에서 철수시켜야 하며, 이것이 실패할 경우는 일본 단독으로 러시아와 타협에 들어가야 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무력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것은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것이었다. 즉 러시아군에 비해 일본군이 우세하며,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완성되지 않았으며, 영일동맹이 존재하며, 또 러시아의 만주점령으로 중국에서 반러시아 정서가 확산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를 놓치면 이같은 호기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³⁹⁾

반대로 러시아는 국내적으로 혁명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9) Nish, *Op. cit.*(1972), pp. 157~161.

고 전쟁을 원했다. 이것은 유럽에서 1848년 혁명 이후 유럽의 절대왕정들이 국내적으로 산업화와 민족자결의 확산에 따른 정치적 불안과 대외적 행위, 특히 전쟁과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독일은 3차례의 전쟁을 통해 민족통일을 완성하면서 사회혁명을 피하고 이후 과격파들을 제국체제내에 흡수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혁명을 피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오스트리아는 전쟁에서 실패함으로써 국가체제를 오스트로-헝가리 이중왕조로 변경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전쟁에서 패배하면 혁명이 일어난다고 믿게 된 것이다. 러시아 역시 20세기초 대외적 전쟁만이 국내혁명을 저지하는 수단이라고 믿고 손쉬운 상대라고 평가한 일본과의 전쟁을 결행하게 된 것이다.⁴⁰⁾ 러시아의 여론은 물론 동아시아에 주둔한 러시아의 육군과 해군 지도자들은 러시아의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나폴레옹도 이겨낸 러시아가 일본을 겁낼 이유가 없으며, 전쟁은 러시아군의 일본상륙으로 끝날 것이라고 호언했다. 오히려 일본의 외교적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 ‘제2의 세바스토폴’이 될 것이라고 일본과의 전쟁을 원했던 것이다.⁴¹⁾ 이것은 일본과 러시아의 국내외적 정책 및 상황과의 연계에서 러일전쟁을 설명한 것이다.

2. 러일전쟁의 경과와 전후처리

1) 러일전쟁의 경과

러일전쟁은 서양 제국주의 열강의 팽창 이후 비서양 국가가 서양 열강 중

40)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유럽국가들이 전쟁과 혁명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 관해서는 Taylor, A. J. P., *The Struggle for Mastery in Europe 1848~1918*(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xxxiii~xxxv 참조.

41) Kajima, *Op. cit.*, Vol. II, pp. 114~115.

세바스토폴은 크림아 전쟁중 영국 등 연합군에 함락된 흑해 크림아반도에 있는 러시아 군항이다.

하나를 상대로 싸워 이긴 최초의 전쟁이다. 일본은 이 전쟁이 국가의 운명이 걸린 것이라는 각오 아래 나고야에大本營을 설치하고 정치지도자들과 국민이 단결하여 총력전 태세로 이에 임했다. 러시아는 국내적으로 혁명의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정치·경제의 중심부인 유럽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극동’지역에서 일어난 분쟁에 대해 제한적인 군사·경제적 자원을 동원하여 대응했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의 절대적 이해와 러시아의 부차적인 이해가 충돌한 전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의 입전태세는 ‘일본은 사활을 걸고 싸우며 러시아는 저녁식사를 위해 싸운다’고 비유되었다.¹⁾ 그러나 대륙세력인 러시아는 그들의 능기라고 할 수 있는 육상전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발틱함대를 극동戰域에 동원하는 무리수를 시도하지만 실패했다. 이 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는 지난 수백년간 지속된 서양 열강들의 식민지 지배가 그 절정을 지나 쇠퇴하는 전주곡으로서 식민지 해방운동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것이다.

전쟁행위는 일본에 의해 개시되었다. 일본 연합함대는 1904년 2월 6일 사세보항을 출발, 러시아 함대가 머물고 있는 인천과, 황해에서 러시아 해군의 거점인 요동반도의 여순으로 향했다. 인천으로 향한 제4전대는 육군 운송선 3척을 호송, 이들을 한반도에 상륙시키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일본 함대는 2월 8일 인천에 정박 중인 러시아 순양함 2척을 공격, 침몰시키고 수송선은 상륙작전을 완료했다. 러일전쟁은 이같이 인천 앞바다에서 시작되었다. 여순으로 향한 연합함대는 2월 9일 심야에 러시아 함대를 기습하여 전함 2척, 순양함 1척을 좌초시켰다. 이어 2월 10일 일본이 먼저 러시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고 러시아도 같은 날 일본에 전쟁을 선언했다.

전쟁이 시작되자 일본이 예상외로 연전연승을 거두었다. 러시아의 전쟁준비는 충분치 못했으며 더구나 군수품 보급은 5,000마일 이상이나 떨어진 모스크바로부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철도에 주로 의존하고 있었다. 먼저 여순항에서 러시아 함대가 전멸함으로써 동아시아 해역에서 러시아는 해군으로 일본 본토를 위협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여순항은 발해만과 만주로 나아가

1) Okamoto, Shumpei, *The Japanese Oligarchy and the Russo-Japanese War*(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0), p. 105.

는 통로라는 전략적 요지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게는 청일전쟁 후 3국간섭으로 일본으로부터 빼앗은 극동경영의 본거지로, 일본에게는 3국간섭의 치욕을 씻는 복수전이라는 강력한 상징성을 갖고 있었다. 육지에서의 첫 전투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의주와 중국의 안동 지역에서 전개되었다. 일본군은 도강을 저지하려는 러시아군의 저항을 분쇄하고 4월 30일 압록강 북안에 도달하였다. 유럽 열강들은 이 전투를 보불전쟁 중 프랑스가 참패한 바에센부르크(Weissenburg)전투에 비교하면서 러시아의 자신감이 위축되었다고 평했다.²⁾ 이로써 일본은 한반도에서 만주로의 진격로를 확보, 러시아군을 추격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일본군은 요동반도의 여순항을 향해 진격하면서 9월초에는 遼陽, 10월 중순에는 사호(Shaho)에서 러시아군을 격파하며, 드디어 여순항을 포위, 러일전쟁 중 가장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다음해 1월 1일 여순항의 러시아 수비대가 항복함으로써 전쟁의 명암이 일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었다.³⁾ 이후 전선은 만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3월 10일 만주의 전략적 거점인 奉天(오늘날 심양)대회전에서 전사 2만, 포로 4만 등 10여만 명의 희생을 내면서 패배하였다. 러시아는 육상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발틱함대를 극동해역으로 파견하는 결단을 내리지만 아프리카 희망봉과 인도양을 거쳐 대한해협에 진입한 러시아 함대는 5월 27일~28일 일본 연합함대에 의해 전멸 당하였다.

이로써 전선은 만주에서 러시아의 이해가 집결된 하얼빈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일본은 전쟁 전 추구했던 한반도에서 이해의 확보라는 범위를 넘어 남만주에서 러시아를 축출하고 북만주마저 석권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러시아 세력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한 것이었다. 이것은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이 완전히 일본에게로 기울어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이것은 동아시아에서 세력균형의 유지를 통해 상업적 이해를

2) White, John Albert, *The Diplomacy of the Russo-Japanese War*(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4), p. 151.

3) 육상전투에 관해서는 *Ibid*, pp. 149~154 및 Okamoto, *Op. cit.*, pp. 105~111 참조.

확보하려는 영국이나 미국 등 구미열강들의 이해와도 상반되는 것이었다. 평화협상은 이같은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2) 전후처리와 동아시아 국제관계

‘전쟁은 외교의 연장’이라는 말은 전쟁은 대외정책상의 목표를 외교적 설득으로 획득하지 못할 때 무력에 의존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곧 전장에서 무력충돌로 군사력의 우열이 어느 정도 확인되면 교전국들은 다시금 외교협상으로 전환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유럽 외교사에서 나타나는 고전적 형태이다. 러일전쟁도 이에 벗어나지 않는다. 육상과 해상에서 전투의 승패가 판가름 나기 시작하면서 열강들간의 외교, 강화문제 등이 동시에 표면화되었다. 이 전쟁은 또 시기적으로 동아시아가 서양 제국주의의 팽창과 함께 범세계적으로 확대된 국제정치의 무대에서 하나의 場으로 기능하던 20세기초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열강들의 외교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열강들은 전쟁 발발 이전부터 다른 열강들의 태도를 저울질하며, 전쟁의 시작과 함께 외교적 노력을 재개했던 것이다. 따라서 전쟁의 진행과 함께 열강들의 태도를 간단히 일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열강 중 일본과 동맹관계에 있던 영국은 동맹조약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프랑스는 러시아와의 동맹이 유럽에서 독일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엄정중립을 선언했다. 미국·독일·중국도 중립을 약속했다.⁴⁾ 이같은 상황은 일본이 전장을 동아시아로 국한함으로써 1895년 청일전쟁 후 승리의 전리품을 상실한 3국간섭과 같은 악몽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나 열강들의 입장이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 전쟁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의 열강관계에서 양국의 입장을 오히려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하여 가능하면 전쟁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러시아는 물론 일본이 영

4) 열강들의 중립선언에 대해서는 Kajima, Morinosuke, *The Diplomacy of Japan 1894~1922*, Vol. II (Tokyo : Kajima Institute of International Peace, 1976), Vol. II, pp. 161~168 및 White, *Op. cit.*, pp. 166~168 참조. 중국도 중립을 선언하며 열강들, 특히 미국과 영국이 교전국들에게 그 보호를 요망한다 (Hay to Griscom, 1904. 2. 10, FRUS, 1904, pp. 418~419).

국의 사주를 받아 전쟁을 일으켰으며, 일본은 영국의 보병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해군은 영국이 담당하고), 또 영일동맹이 없었다면 일본이 감히 러시아에 도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영국은 일본의 입장에 동조하지만 영국의 이해가 거의 없는 한반도와 만주를 두고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에 들어가는 것을 고무할 이유가 없었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 열강들의 관심은 일차적으로 유럽의 열강관계였다. 영국은 1903년이 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크게 개선했으며, 특히 러시아의 동맹국인 프랑스와 함께 앞으로 러시아와 분쟁을 일으킬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런데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영국과 프랑스는 각국의 동맹 관계에 의해 불필요한 전쟁에 말려들게 될 것이며, 이것은 영-러관계를 다시 악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영국은 일본이 이 분쟁에서 영국에게 공동행동의 추구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받아들여 동맹조약에 따라 엄정중립을 선언하고 정부차원에서 일본에 대한 재정지원도 고려하지 않았다.

더구나 영국은 영일동맹에 의거하여 일본을 지원할 의무도 없었다. 영일동맹은 동아시아의 현상유지와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 것이지만 일본의 팽창까지 영국이 지원할 것을 약속한 것은 아니었다. 영국은 동맹의 협상과정에서 일본의 팽창의지를 인지하고 한반도에서 일본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으며, 일본정부가 영일동맹과 병행하여 러시아와 타협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토를 비롯하여 일본측 협상자들도 이같은 영국의 입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영국은 일본이 영국을 대신하여 러시아와 싸우도록 유도했다거나 일본의 대러시아전을 고무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일본은 동맹으로 인하여 러시아의 동맹국인 프랑스가 (독일도 포함해서) 러시아를 도와 참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으로 만족했던 것이다. 그러나 영일동맹으로 일본은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그 입장이 강화되었으며, 또 최종적으로 대러시아전을 결정할 때에도 큰 힘이 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맹은 국제정치에서 협조의 최고 형태라는 점에서 간단한 이론상의 논의로 끝날 수는 없는 것이다. 국가간의 접촉이 활발한 유럽에서는 동맹은 그 조약이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엄밀하게 적용되어 왔다. 영일동맹도 이

같은 관점에서 한번 검토해야 한다. 이 동맹의 성격은 일차적으로 방어동맹이다. 2개국 이상이 연합하여 동맹 중 1국을 공격할 때에만 동맹국은 협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러·일 양국이 싸울 때 영국이 중립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동맹의 개념이 생소한 동양인 일본에서는 이같은 영국의 행위는 혼란을 일으켰다. 물론 영국은 엄정중립을 선언하면서도 일본에게 호의적이었다. 이것은 당시 러시아의 정치·사회형태를 전제적, 미개한 것으로 간주해 온 영국사회의 일반적인 분위기이기도 했다. 당시 서울에 주재한 영국공사 조단(John N. Jordan)은 이 전쟁을 ‘동방의 한 국가와 서방의 가장 나쁜 국가간의 처절한 투쟁’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⁵⁾

영국은 실제로 일본의 전쟁수행을 간접적으로 지원했다. 특히 전쟁을 종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러시아 발틱함대의 전멸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은 우선 러시아와 터키에 대해 평화시 군함의 보스포르스해협 통과를 금지하는 국제협정을 들어 엄중히 경고함으로써 흑해함대의 참전을 저지시켰다. 러시아는 이에 발틱함대를 출동시킬 때 이 함대의 극동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영국의 방해로 받았다. 영국은 발틱함대가 모항을 출발한 직후인 1904년 10월 21~22일 스코트랜드 북쪽 도거뱅크 해역에서 영국 트롤선을 일본 어뢰선으로 오인하여 발포한 사건(Dogger Bank Incident)을 문제삼아 그 처리를 둘러싸고 한동안 발틱함대의 동진을 지연시켰다. 그 후 중립을 내세워 발틱함대에 대한 연료공급과 영국령 식민지에서는 기항을 거부했다. 발틱함대의 동진로에는 아프리카 해안, 희망봉, 실론, 싱가포르, 홍콩 등 영국의 식민지가 산재해 있는데 러시아 함대는 단지 프랑스와 독일의 항구에서 석탄보급을 받았을 뿐이었다. 이것은 이 시기 열강들이 동맹조약이 규정한 내용뿐만 아니라 동맹의 정신에도 충실했던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나 여론은 혼신의 힘을 기울여 싸우는 일본을 동맹국이 방관하고 있으며, 따라서 영국의 행위는 동맹국이라기보다는 중립국에 가까운 것이라고 의심과 불만을 표명했다.⁶⁾ 마지막으로 영국은 비정부,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

5) Jordan to Campbell, 1904. 2. 9 FO/17/1659(私信).

6) Nish, Ian H., *The Anglo-Japanese Alliance-the Diplomacy of Two Island Empires 1894~1907*(London: Athlone, 1966), pp. 270~271 · 281 · 287 · 292.

진 것이지만 일본이 런던에서 차관을 끌어들이도록 허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일본의 전쟁수행을 지원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열강들은 러시아가 완전히 패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이 종결되기를 희망했다. 독일은 (오스트로-헝가리제국도 포함해서)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국력을 소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전쟁으로 러시아 국내에서 혁명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프랑스는 러시아의 패배는 유럽에서 세력균형의 유지에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하였고, 러시아가 빠른 시일내에 동아시아 문제에서 해방되기를 희망했다. 영국도 러시아가 독일과의 국경에 관심을 집중시키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입장이었다. 동아시아 지역에 프랑스보다 이해가 깊은 영국은 미국과 함께 전쟁의 장기화는 이들 양국의 경제적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서 일본의 세력이 지나치게 팽창되어 세력균형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면 자국의 권익이 침해될 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우려했다. 물론 이들은 친일본적 관점에서 일본은 승리자이며 평화의 조건으로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 일본의 요구(한반도를 포함하여)는 ‘정당하며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보았다.⁷⁾ 그러나 이 지역에서 열강의 이해를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은 러·일 양국이 전쟁으로 국력이 약화된 채 만주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가장 친일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금융계도 일본이 러시아를 동아시아 무대에서 완전히 축출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였다.⁸⁾ 즉 서방 열강들은 전쟁이 계속되어 러시아가 동아시아에서 완전히 제거되기보다는 러시아가 패전으로 쇠약한 상태에서 하르빈을 경계로 만주를 양분하여 일본과 ‘균형잡힌 적대관계’를 형성하기 바랬던 것이다.⁹⁾

Nish, *Alliance in Decline—a Study in Anglo-Japanese Relations 1908~23*(London: Athlone, 1972), p. 130. Dogger Bank 사건 및 터키해협 문제에 대해서는 *Ibid*(1966), pp. 289~290·317 참조.

7) Merrill, John E., ‘American Official Reactions to the Domestic Policies of Japan in Korea 1905~1910’(Ph. D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1954), pp. 58~59.

8) Walder, David, *The Short Victorious War—Russo-Japanese Conflict 1904~* (Newton Abbot: Readers Union, 1974), p. 263.

9) 포츠머스조약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Esthus, Raymond A.,

러일전쟁의 전개과정도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 전쟁은 일본이 여러 전투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명백하게 결정짓지 못했다. 일본이 승리한 전투는 모두 러시아 영토 밖에서 일어났다. 일본은 러시아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주지 못했으며, 사할린을 제외하면 러시아의 영토는 침범당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러시아는 항복을 거부하고 전쟁의 계속을 천명했다. 반대로 일본은 승리하면서도 손실이 러시아를 능가했다. 일본의 인적 자원과 군수품은 요양전투에서 고갈되기 시작했으며, 사호전투에서는 한계에 도달했다. 여순전투 역시 러시아측 사상자 28,200명에 비해 일본은 57,789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심양전투 후 패주하는 러시아군을 추적하여 섬멸시키지 못한 것도 일본군의 인적·물적 자원이 고갈되었기 때문이었다. 반면 러시아는 시베리아와 만주의 철도를 통해 보급품을 수송함으로써 요양전투에서 패배한 후에도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었다. 이같은 정세를 정확히 인식한 일본 군부는 전선의 상황이 일본에게 유리할 때 종전협상을 전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전략과 정략의 일치’라는 표현으로 동경정부에 평화회담을 희망했다.¹⁰⁾ 러시아 역시 1905년 1월 수도 페트로그

Theodore Roosevelt and Japan(Seattle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67), pp. 37~39, 62~66 및 Griswold, A. Whitney, *The Far Eastern Policy of the United States*(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38), pp. 104~105 참조. 한가지 보충할 것은 고전적 세력균형 이론, 특히 그 비판자들에 의하면 ‘적대감’이란 균형을 이루는 데에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것이다(Wight, Martin, *International Theory-The Three Traditions*(ed.), Gabriele Wight and Brian Porter New York : Holmes & Meier, 1992, pp. 178~179·261~262). 따라서 당시 미국이나 영국의 정책은 만주에서 러-일 양국의 입장이 대립적이라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또 세력균형은 상황(situation)·정책(policy)·국제체제(system) 등 관점에 따라 의미를 달리한다. 미국이나 영국이 자국의 입장과 정책으로서 동아시아에서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과 전쟁의 결과 일본과 러시아 간에 균형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지는 상황이 조성되었다는 것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10) Okamoto, *Op. cit.*, pp. 105~106.

White, *Op. cit.*, p. 186.

만주 주둔군 총참모장 고다마 겐타로(兒玉源太郎)는 동경 정부에 평화회담을 건의하기 위해 동경에 도착한 후 ‘총을 쏘았으면 끝낼 줄도 알아야 한다’, ‘일본에는 의무성도 없느냐’고 힐문하면서 일본이 평화회담의 개최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을 힐란했다(*Ibid.*, pp. 111~112).

라드에서 ‘피의 일요일’ 학살로 혁명적 기운이 팽배했으며 봉천회전 후 더 이상의 전비 지출은 재정파탄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비록 일본의 물적·인적자원이 고갈되었지만 전쟁이 계속된다고 해도 러시아가 일본을 패퇴시키기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러일전쟁에서는 이같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던 일본이 인적·재정면에서 먼저 고갈되어 평화를 제의하게 되었던 것이다.

러일전쟁의 전후처리는 교전 양국간의 회담으로 이루어졌다. 즉 만주의 문호개방은 전쟁의 주요 원인이었으며 열강들의 공통 관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러·일 양국의 입장은 열강들의 거중조정이 필요하다면 수용하겠지만 전후처리를 열강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가 아닌 양국간의 회담으로 해결한다는 것이었다. 러시아는 1856년 크림아전쟁을 종결한 파리회의와 1878년 터키와의 전후 처리를 다룬 베를린회의가 모두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으며, 일본도 10년 전 1895년 청일전쟁 후 3국간섭의 악몽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러일전쟁 당시 복잡한 열강관계를 고려하면 어느 일국의 중재는 다른 열강들의 질투와 간섭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¹¹⁾

전후처리 문제는 이상의 문제점과 함께 각국의 권익과 영향권이 조정되는 과정을 간단히 언급해야 할 것이다. 중국 본토는 북경정부가 중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명목상으로 전쟁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후처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지역은 또 열강들의 이권이 산재되어 있으며 영국과 미국이 중국의 독립유지, 영토-주권의 보호를 동아시아 정책의 기초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교전국의 평화협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즉 중국의 분할은 ‘다행스럽게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후문제의 처리는 만주 및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이 중 만주에 대한 일본의 진출은 전쟁 전 일본의 요구 이상으로 진척되었다. 전쟁 전 일본이 러·일간에 한반도와 만주에서 상호 영향권을 인정한다는 소위 韓滿交換을 제안할 때 만주에 관한 요구는 경제적 문호개방 정도였다. 그러나 만주에서 계속 승리하여 전선이 북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종전을 맞게 됨에 따라 일본은 러시아

11) White, *Op. cit.*, pp. 195~196.

가租借했던 여순항 등 요동반도는 물론 남만주철도까지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반도에서도 일본은 원래 요구했던 우월적 지위보다 훨씬 강력한 권익을 인정받았다. 한국의 합병은 이같이 열강들의 권익이 조정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1905년 9월 미국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의 주선으로 포츠머스에서 개최된 평화회담은 전쟁의 추이와 함께 일본의 재정악화, 동아시아 세력균형 유지를 위한 열강들의 정책 등 전투 외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작용한 것이었다. 또 전후처리가 러·일 양국간의 회담으로 진행되면서 그외 주요 열강들 간에도 새로운 세력균형의 변화에 맞추어 세력권을 상호 조정하였다. 그 중 중요한 것이 1905년 7월 미국·일본간의 태프트(Taft)-가츠라(桂)밀약과 8월 영·일간의 2차영일동맹이다. 이 중 전후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정립이라는 관점에서 열강들에게 전례로 제시된 것은 영일동맹이다.

(1) 영일동맹의 개정

영일동맹의 개정은 러일전쟁 후 변모한 동아시아 정세에 비추어 양국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영국이 해상세력으로서 동아시아 문제에 관여할 능력을 보유한 유럽국가이며, 일본이 지역강대국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양국간의 동맹과 그 내용은 동아시아 국제체제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양국도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영국은 영일동맹의 지속여부가 일본이 러시아에게 제시한 평화조건을 규정할 것이라 평가했다. 영국이 종전에 맞추어 동맹조약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열강들은 영국이 조약기간이 만료되는 1907년후 동맹관계를 폐지할 의사를 가진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따라서 동맹조약이 개정된다면 일본은 향후 러시아의 복수전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날 것이며, 러시아 역시 일본을 상대로 전쟁을 재개할 의지를 갖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전후처리에 임할 것이다. 일본의 평가도 동일했다. 영일동맹이 존속되어야 일본은 승리의 과일을 충분히 차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복수전의 악령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었다.¹²⁾ 즉 일본의

12) Nish, *Op. cit.*(1966), pp.300ff.

관점에서 동아시아 지역평화는 영일동맹의 지속여부에 달려 있던 것이다.

2차 영일동맹은 다음의 3가지 점에서 1차동맹과 다르다. 우선 동맹의 성격이다. 1차동맹은 동아시아의 현상유지를 위한 방어동맹이었다. 그러나 2차 동맹은 공수동맹이었다. 러시아가 종전 후 일본의 권익을 침해할 때 영국은 일본을 지원할 의무가 있으며, 일본 역시 영국이 인도대륙의 방위를 두고 영국을 지원해야 한다. 이론상으로는 이같이 양국이 상대국의 안보상 위기에 원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러시아의 복수전으로 인한 일본의 안보위협을 영국이 확실한 방법으로 보장한 것이었다. 러시아가 비록 이번 전쟁에서 패했지만 일본이 한 척의 전함을 건조·구매할 때 3척을 건조·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즉 러시아가 일본만을 상대로 복수전을 구상한다면 함대 재건을 시도할 수도 있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영국의 지원이 계속된다면 영·일 양국의 함대에 대항할 만한 함대를 건설한다는 야망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2차동맹은 이같이 일본의 안보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었다.

두번째는 동맹의 범위이다. 이 문제도 러시아의 잠재적인 위협과 관련된 것이다. 영국은 러일전쟁 후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팽창은 저지되었으나 러시아는 여전히 팽창을 주도할 만한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캐스피해 연안 횡단철도를 완성했기 때문에 인도국경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50만 병력을 쉽게 동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은 1차동맹 협상 때 동맹의 범위를 그들의 이해가 전혀 없는 인도대륙까지 확대하는 데 반대했지만 이번에는 ‘장기적 관점에서’ 영일동맹이 가져다 줄 이익을 위해 영국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었다.

세번째는 한국독립 조항의 폐기이다. 앞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영국은 1902년 1차동맹에서 한반도에서 일본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했지만 동시에 한국의 독립도 보장했다. 이 동맹은 러시아의 팽창으로 야기된 동아시아의 정세에서 그 효력을 극대화하지만 영일동맹은 러일전쟁의 종결과 함께 불협화음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동맹이 지속되는 20년 동안(1922년까지) 가장 원활하게 운용된 것이 바로 1902년~1905년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동아시아 지역 수준에서 러시아라는 가상 적국이 뚜렷이 부각되었기 때문이었

지만, 한반도 域內수준에서도 양국간의 이해와 접근법이 일치했다는 점도 일조를 했다. 여기에는 양국의 서울주재 공사인 조단(John N. Jordan)과 하야시(林權助)의 개인적 친분까지 겹쳐 구체적으로 일본의 한국정책에 대한 영국의 지지는 절정을 이루었다.¹³⁾ 이 결과 2차동맹은 서문에서 한국의 독립에 관한 언급이 삭제되었을 뿐 아니라 일본이 한국에서 정치·군사·경제적으로 특수이익을 가지며, 이러한 이익을 옹호 증진하기 위해 한국에 대해 지도·감리 및 보호조치를 취하는 데에 영국이 동의하게 되었던 것이다(2조).

그러나 국가간의 거래는 상호교환 혹은 대가라는 원칙 위에서 이루어진다. 일본은 영국이 동맹의 범위를 인도국경까지 확대한 대가로 한국문제의 처리에 있어 영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입장은 1차동맹과는 달리 단순한 것이었다. 1차동맹을 체결하던 시기 영국은 한국문제를 두고 러시아와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2차동맹을 논의할 때는 이같은 우려는 사라졌다. 더구나 일본의 요구는, 영국의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에 새로운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즉 러일전쟁의 개전과 함께 일본군이 한반도를 완전히 점령했으며 이후 두 차례의 한일의정서를 통해 일본이 확보한 권익을 단순히 인정하면 해결되는 것이었다. 영국은 당시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함께 한국의 독립을 보호하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 곤혹스러워 했지만, 한반도에 존재하는 기정사실(fait accompli)을 승인하는 것뿐이라는 논리로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다.¹⁴⁾

영국의 입장은 국제정치의 현실주의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전적으로 타당한 것은 되지 못한다. 일본의 한국점령은 전쟁기간 중에 이루어진 군사적 조치에 불과한 것이며, 따라서 국제법적으로 승인된 영속성을 갖는 것은 아니었다. 물론 2차례의 한일의정서는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며, 영국은 물론 다른 열강들은 일본이 이를 강압적으로 체결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영국은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기 1년 전인 1904년 9월, 친일 외교고문 스티븐스(Durham W. Stevens)가 한국의 외교업무를 장악하자 앞으로

13) 구대열, 《제국주의와 언론—배설, 대한매일신보 및 한·영·일 관계》(이대출판부, 1996), 81~84쪽.

14) Nish, *Op. cit.*(1966), pp. 320~322.

한국의 대외관계는 도쿄에서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서울의 영국공사관은 철수할 것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¹⁵⁾ 2차동맹조약이 공개된 후 한국정부가 한국 독립보장의 폐지와 2조의 한국관련 조항은 기존의 한영조약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폐기할 것을 요망하자 서울주재공사 조단은 이것은 1·2차 한일의 정서에서 한국 자신이 승인하여 조성된 상황을 인정한 것뿐이라고 통명스럽게 대답했다.¹⁶⁾ 더욱이 전쟁발발 이후 한국정부와 왕실은 영국의 관점에서는 ‘반동적인’ 러시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능·부패로 인하여 독자적으로 개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본에 의한 보호가 더 바람직한 해결안이라고 한국의 독립에 대한 지지를 포기하는 입장 변화를 정당화하고 있었다.¹⁷⁾

(2) 태프트-가츠라밀약

일본은 영일동맹의 개정과 비슷한 시기에 미국을 상대로 해서 한국문제를 포함한 동아시아 문제 전반에 걸쳐 의견을 교환했다. 소위 태프트-가츠라밀약이다. 이 사건은 오늘날까지 한국 근대사·외교사에서 잘못 해석되어 내려오고 있는 문제중 하나이다. 여기서는 기존의 연구서들을 간단히 정리한 다음 이에 관한 문제점들을 검토하겠다.

기존의 해석은 일본이 영일동맹의 개정과 함께 미국으로부터도 한국문제에 관해 영국과 같은 수준의 보장을 얻으려 했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1905년 7월 미육군장관 태프트(William Howard Taft)가 필리핀을 시찰하기 위한 여행을 하는 중 도쿄에 머물게 되었다. 일본수상 가츠라는 이에 태프트와 함께 동아시아 정국 전반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가츠라는 ‘한국은 러일전쟁의 직접 원인이므로 일본은 이 전쟁의 당연한 결과로서 한국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태프트는 ‘한국이 일본의 동의없이 타국과 어떠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

15) Jordan to Campbell, 1904. 9. 10, FO/17/1660(私信).

16) Jordan to Lansdowne, 1905. 10. 17, FO/17/1693(142).

17) 이에 대한 논의는 구대열, 앞의 책, 77~82쪽 및 Nish, *Op. cit.*(1966), pp. 312~322도 참조할 것.

는 정도의 중주권을 일본이 한국에 설정하는 것은 당연한 戰果에 속하고 극동의 영원한 평화에도 공헌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동의를 표했다. 이어 양인은 '첫째 일본은 필리핀에 대해 하등 침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미국의 지배를 확인하고, 둘째 극동의 평화유지를 위해, 미·영·일 3국이 실질적인 동맹관계를 확보하며, 셋째 일본의 한국에 대한 중주권을 미국이 인정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다. 이것을 1924년 미국 외교사학자 테네트(Tyler Dennett)가 논문에서 상호 대가를 교환한 권력정치적인 비밀조약이라고 규정했다. 이후 이 문제는 아무튼 비판적 검토없이 한국과 필리핀을 교환한 '밀약'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¹⁸⁾

그러나 이 해석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 우선 이것은 '밀약'이나 협정·조약이 아니다. 단지 가츠라와 태프트(물론 양인은 양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간의 대화를 기록한 메모에 불과한 것이다. 태프트는 대화 내용을 신임 국무장관 루트(Elihu Root)에게 보고하면서 가츠라가 회견을 열망하여 피하기 어려웠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의 발언이 잘못되었다면 국무장관이 수정할 것을 권유했다.¹⁹⁾ 태프트는 이어 이 회견내용을 또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승인받는다. 이 '밀약'이 맺어진 2년 후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될 정도로 악화되는데, 이때 미국정부는 이 '밀약'을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두 국가간에 위기상황이 조성될 경우 양측의 정책 입안자들은 양국관계를 규정하는 기존의 조약들을 점검하며 이것을 기준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이다. 1907년의 위기에서 미국무성이 태프트-가츠라 '밀약'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것이 양국관계에 의무를 규정하는 협정이나 조약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18) 이에 관한 일반적인 기술은 金景昌, 《동양의교사》(박문당, 1982), 554~555쪽; 성황용, 《근대동양의교사》(명지사, 1992), 338~339쪽 참조.

19) 태프트의 전기에는 태프트가 심각한 협상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것이 아니었으며, 일본정부 지도자들의 면담 내용도 육군장관인 자신이 국무성의 업무에 간섭하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국무성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Anderson, Donald F., *William Howard Taft—A Conservative's Concept of the Presidency*, Ithaca &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68, pp. 22~23 및 Pringle, Henry F., *The Life and Times of William Howard Taft*, New York: Farrar & Rinehart, Inc., 1939, Vol. I, pp. 303~304).

이같은 형식적인 측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일 것이다. 미국은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 결과 필리핀을 소유하게 되었다.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지배는 국제적으로도 확고한 것이었다. 또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외국의 어떠한 간섭도 독자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본이나 다른 열강으로부터 필리핀의 안보에 대해 보장을 받는다는 것은 넌센스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밀약’은 기존의 정세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일본의 한국 장악은 일본에게 유익하며 또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천명한 것뿐이라는 해석이다.²⁰⁾

태프트-가즈라밀약이 그렇다고 해서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이들 양국 지도자간의 대화에서 나타난 태프트의 태도는 당시 서양사회에 팽배한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이 국제정치를 해석하는데 하나의 기준이 되었으며, 미국이 한국문제도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사회진화론은 적자생존·생존투쟁 등 다윈(Charles Darwin)의 진화론적 개념들은 사회집단에 적용시킨 것이다. 종족·민족·사회·국가도 유기체이며 모두 생존투쟁 법칙에 따라 투쟁한다. 여기에서 약자는 강자의 먹이가 되기 마련이며 우수한 종족·민족·국가만이 살아 남는다. 투쟁은 진보의 조건이며 역사의 영원한 법칙이다. 전쟁은 창조의 아버지요 문화의 어머니이다. 따라서 민족·국가의 강인함을 보장해 주는 군국주의와, 팽창과 정복이 특정 인종·국가에게 부여되었다는 사명의식을 고양시킨다. 사회진화론이 본 주제에 갖는 의미는 서방 열강들의 식민지 정복과 타민족 지배, 대외팽창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라는 점이다. 즉 문명이란 관점에서 국가나 사회를 평가하는 것이다. 사회진화론은 다윈의 본래 의도와는 관계없이 당시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계급의 권익 확대에 직면한 부르조아지 계급의 기득권을 옹호하는데 이용되면서 유럽과 미국사회에 급속히 확산되었다.²¹⁾

20) 이에 관한 논의는 Esthus, pp. 102~106. Chay, Jongsik, ‘The Taft-Katsura Memorandum Reconsidered’, *Pacific Historical Review*, 37-3(1968. 8)도 참조.

21) 사회진화론에 대해서는 Hofstadter, Richard, *Social Darwinism in American Thought*(Boston: Beacon Press, 1992), 특히 9장 및 전복희, 〈사회진화론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한국에서의 기능〉(《한국정치학회보》 27-1, 1993) 참조.

루즈벨트 대통령을 포함하여 당시 상당수의 歐美 지식인들은 구한말 한국의 정치·사회적 상황이 후진적이며, 한국은 국제경쟁에서 패퇴하는 열성민족·국가의 표본으로 간주했다. 이들은 1880년대 한국의 개국에서 합방에 이르기까지 정치지도자의 부패와 무능, 근대국가로 향한 개혁의지와 독립 능력의 결여, 일반 대중에 대한 착취, 이로 인한 대중의 무지와 경제적 빈곤, 사회적 혼란, 이에 편승한 주변 열강들의 침탈 등을 끊임없이 목격해 왔다. 열강들은 이같은 관점에서 한국정부나 군주를 유럽의 근대국가와 대비되는 동방 이슬람문화권 군주들처럼 근대적 국가의 통치술은 없으면서 궁중 음모적 수법에만 익숙하다고 평가했다. 구한말의 상황은 전근대적 전통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외세의 침탈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목격되는 것이지만, 한국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은 당시 서방 열강들의 한국관계 외교문서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흐름의 하나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반면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서방의 기술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적 중국’에 대비되는 ‘진보적 일본’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일본의 한국정책은 침략성을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문제삼기보다는 한국에 정치-제도적 개혁과 선진문명의 전파를 위해 노력한다는 관점에서 높이 평가되었다.²²⁾

조. 사회진화론과 제국주의 시대정신에 대해서는 Langer, *Op. cit.*, pp. 67~100 참조.

22) 미국의 한국관은 Esthus, *Op. cit.*, pp. 7·39·96~100·110~111; Harrington, Fred H., *God, Mammon and the Japanese-Dr. Horace N. Allen and Korean-American Relations, 1884~1905*(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44), pp. 96~98·326; Dennett, Tyler, *Roosevelt and the Russo-Japanese War*(Garden City, N. Y.: Doubleday, Page & Co., 1925), pp. 108~111 등 참조. 친일적인 미국인 학자 Ladd는 고종을 ‘최고 음모꾼(a master of intrigue)’이라고 묘사했다(Ladd, George Trumbull, *In Korea with Marquis Ito*,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08, pp. 151~152). 당시 영국의 한국관에 대해서는 구대열, 앞의 책, 77~80쪽 참조. 영국은 한일관계를 강한 종족과 약한 종족간의 투쟁이라 보았으며(Jordan to Lansdowne, 1904. 6. 30, FO/17/1660(144)), 한국에 대해 국민은 어리석고 나라는 망해 가고 있어 일본이나 중국·러시아 등 한반도에 야심을 가진 주변 강대국에게 병합될 운명이라고 진단하고 있다(Jordan to Lansdowne, 1904. 1. 20, FO/17/1659(17) 및 그 첨부물). 반면 일본은 영국이 자랑하는 이집트 지배 모델을 한반도에서 실험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이같은 인식은 당시 동아시아 문제를 다루던 미국 지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특히 전형적인 사회진화론자인 루즈벨트는 쇠퇴한 민족의 희생 위에 이루어지는 팽창을 지지하면서, 한국은 독립을 위해 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단정, 러일전쟁 후 일본의 보호권을 간단히 인정해 버렸다. 동일한 논리에서 미국이 파산한 콜롬비아 정부로부터 파나마 지역을 빼앗아 운하를 건설하는 것이 세계문명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²³⁾

태프트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일본 방문 중 연설을 통해 문명국(강대국)이 후진국(약소국)에 간섭하여 이를 개혁하는 행위를 당연한 권한이며 이것은 강대국들에게 전략적 필요성에 의한 간섭과 동일한 수준의 정당한 이해라고 강조하고 있었다. 한일관계를 이같은 관점에서 평가하면서, ‘일본은 15세기적 방법으로 잘못 통치하고 있는 가까운 이웃인 고대 왕국을 개혁하고 소생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이해를 갖고 이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²⁴⁾ 즉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논리이다. 그리고 이같은 지배는 열강들이 지역평화를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약소국에 대한 개입과 동일하게 정당하다는 논리이다. 미국의(영국도 포함해서) 한국문제에 대한 인식은 그들의 정치적·전략적 이해와 합쳐 일본의 한반도 진출을 도덕적인 측면에서 지지하는 기초가 되었다. 일본도 이 논리를 충실히 추종하여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공고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었다. 태프트-가츠라밀약은 이같은 상황에서 미육군장관 태프트가

하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러일전쟁 초기 일본이 한국정부를 장악, 각종 개혁 조치를 발표하자 ‘옳은 방향을 향한 일보’라고 찬양하고 있다(Minute on Cockburn to Grey, 1906. 5. 15, FO/371/179 (22706/306); Lansdowne to MacDonald, 1905. 9. 26, FO/46/590(151)). 한국 군주와 그리스나 아프간 등 동방 제국의 군주들의 비교는 구대열, 앞의 책, 25쪽 참조.

23) Esthus, *Op. cit.*, p. 101.

Combs, Jerald A., *American Diplomatic History—Two Centuries of Changing Interpretations*(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p. 67.

Dougherty, James E. & Pfaltzgraff Jr., Robert L., *American Foreign Policy—FDR to Reagan*(New York: Harper & Row, 1986), pp. 9~10.

24) Taft to Theodore Roosevelt, 1907. 10. 5, M862, R. 191, 1797/380/383의 첨부물(M은 Microfilm, R은 Roll의 약어).

가벼운 기분으로 일본 수상과 동아시아 정세에 관해 환담하면서 미국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천명한 정도의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²⁵⁾

(3) 포츠머스조약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 종결을 위한 평화회담은 앞선 언급한 여러 이유에서 1905년초부터 제기되었다. 일본은 4월 8일 군부의 건의에 따라 각의에서 평화회담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에 대한 자유행동권, 요동반도 조차권 양도, 배상’ 등의 조건으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러·일간의 평화회담을 주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전선에서 계속 패배하고 있던 러시아는 동진 중인 발틱함대가 전세를 반전시켜 줄 것으로 믿고 협상을 거부함에 따라 해전의 추이를 기다려야만 했다. 결국 발틱함대가 동해에서 전멸당한 후인 6월초 러시아는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아시아에서 러시아령의 전부를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의 설득을 받아들임으로써 교전 당사국들은 미국 뉴햄프셔(New Hampshire)주의 포츠머스 군항에서 평화회담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이 회담에 러시아측에서는 위테(Sergei J. Witte)가 전권 수석대표로, 로젠(Romanovich R. Rosen) 주일공사가 차석대표로, 일본측에서는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 외상이 수석대표로, 다카히라 코고로(高平小五郎) 주미공사가 차석대표로 참석, 8월 9일 예비회담이 열렸다.

일본은 러시아측에 12개 평화조건을 제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정치·군사·경제상의 우월적 이익 및 지도·보호·감리의 권리 승인(1조), 러시아의 만주 철병 및 만주에 대한 중국의 주권 및 경제적 기회 균등과 배치되는 특권의 포기(2조), 요동반도 조차권 및 남만주철도 권익 양도(3조 및 7조), 사할린 양도(5조), 전비 변상(9조), 중립국이 억류 러시아 전함을 일본에 교부할 것(10조), 극동 해군력 제한(11조), 오흐츠크해·베링해·동해 연안의 어업권 허여(12조) 등이다.

25) 가츠라-태프트 밀약에 관한 국내의 기존 해석에 주의를 환기시킨 연구로는 李愚振, <러일전쟁과 한국문제>(한국 정치외교사학회 편, 《한국외교사》 1, 집문당, 1993), 346~348쪽. 이 논문은 그러나 일본이 루즈벨트 개인의 대일본관 변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Okamoto도 일본 지도층이 Roosevelt의 대일관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우선 러시아는 이번 전쟁은 전승국과 패전국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종결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전쟁의 패배를 인정하여 국가적 위엄을 손상시키는 영토할양이나 전비 배상, 그리고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를 제한하는 문제들은 어떠한 양보도 거부했다. 구체적으로 사할린 양도나 전비 보상, 극동 해군력 제한 등은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외 중립국이 억류하고 있던 러시아 전함의 양도는 국제법과 러시아 국내법에 위반된다는 근거로 거부했다. 러시아의 강경 자세는 만주 주둔군이 강화되어 전쟁을 계속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외 일본이 제기한 조건들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있다는 태도였다.²⁶⁾ 일본도 국내여론을 의식하여 배상과 영토할양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회담은 결렬의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루즈벨트 대통령이 평화회담의 성공을 위해 러시아 황제를 설득하고 또 일본에게는 배상을 포기토록 함으로써 러시아가 사할린 남부(북위 50도선 이남)를 양도하는 선에서 타협, 9월 5일 포츠머스조약이 조인되었던 것이다.²⁷⁾

그러나 러·일간의 협상과정은 이 지역의 열강관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러시아는 이 조약으로 한반도에서 일본의 지위를 영·미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정하기는 했으나 양국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었다. 영·미 양국은 러시아의 패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세력균형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반면, 러시아는 일본이 러시아 권익을 획득하는 것 자체가 균형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일본이 취한 권익의 수준과 성격도 영·미의 해석과는 달리 러시아의 안보 등 중요한 국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았다. 일본이 한반도에서 경제적 우월권, 한국의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정치적 우월권을 갖느냐 혹은 군사적 자유권까지 보장받느냐는 차이도 중요하였다. 또 현 단계에서는 패전으로 양보가 불가피하지만 언제인가 이를 회

26) 평화회담의 양측 대표들 간의 협상 기록은 Kajima, *Op. cit.*, Vol. II, 6~8장. 특히 러시아의 입장은 수석대표 Witte의 회고록에 잘 나타나 있다(Yarmolinsky, Abraham(ed.), *The Memoir of Count Witte*, London: Heinemann, 1921, 15~16장). 그의 김경창, 앞의 책, 540~547쪽; White, *Op. cit.*, 12~16장 참조.

27) 포츠머스조약의 전문은 *FRUS, 1905*, pp. 824~828; Kajima, *Op. cit.*, Vol. II, p. 391.

복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일본이 요구하는 권익의 성격을 가능하면 잠정적·가변적인 것으로 한정해야 했다. 일본의 한국지배가 합방과 같이 항구적인 것이면 러시아가 권익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러시아는 명목상 이유를 내세워 일본이 차지할 권리의 성격을 제한하려 했다. 우선 러시아는 한반도가 러시아의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일본의 우월적 지위는 인정한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의 독립과 주권 존중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러시아는 한국의 독립은 국제적으로 승인된 것이므로 전쟁을 종결하는 러·일 양국의 조약이나 결정에 의해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또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에는 서명할 수 없다는 것이 러시아의 명분이었다. 따라서 러시아는 평화협상에서 한국의 독립유지를 강조하였으며 2차영일동맹의 한국조항도 일본의 한국지배가 합방 전의 단계라는 점에서 수락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 다음 러시아는 이 전쟁이 대륙에 거점을 확보, 팽창적 의도를 갖고 있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음으로 한반도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전략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조치는 수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해주를 직접 위협하는 일본군의 북한지역 주둔이나 한반도의 무장화 혹은 블라디보스토크의 비무장화는 인정할 수 없으며 또 러시아 함대의 대한해협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한반도 남단은 비무장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최종 조약안은 한반도에서 일본의 우월적인 정치적·군사적·경제적 권익의 인정, 일본이 이를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러시아가 방해·간섭하지 않을 것과 한·러 국경지대에서 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군사행동을 자제할 것 등으로 조정되었다.²⁸⁾

포츠머스조약은 전통적인 세력균형정책의 운용이 낡은 전형적인 산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조약으로 과거 동아시아에서 수정주의적 정책을 추진해왔던 러시아의 목표가 일단 좌절되었다. 19세기말 이래 이 지역의 국제정치에서 변화추구적 정책을 정력적으로 추진해 온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했다

28) White, *Op. cit.*, pp. 251~254·268~271. 한반도와 관련하여 앞으로 러-일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제2조이다(*FRUS, 1905*, p. 825).

는 사실은 종전 후 러시아가 비록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로 존속한다고 할지라도 그 역할이나 위상이 과거와 같을 수 없으며, 따라서 전후 이 지역의 열강관계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당사국인 일본과 러시아만이 아니라 미국·영국 등 열강들에게도 해당된다. 한 지역의 국제체계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동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러시아의 팽창주의적 정책에 의해) 긴장과 갈등이 조성될 경우, 흔히 전쟁이나 주변의 약소국을 분할하는 상호보상의 방법으로 이를 해소했다. 1905년 동아시아의 경우 러·일 양국은 전쟁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했다. 그 대상이 러시아 영토의 일부인 사할린도 포함되었으나 대부분이 한반도와 만주라는 제3의 지역이었다. 이들 지역에서 러시아가 보유했던 권익들을 일본에 양보함으로써 보상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형태의 세력균형이 형성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영·미 양국은 보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양국은 전쟁의 결과 동아시아에서 세력균형이 양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확신했다. 양국의 이권은 침해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원인이었던 러시아의 문호개방 거부라는 장애가 제거됨으로써 앞으로 더욱 활발한 상업활동을 보장받았다. 이들의 낙관적인 평가는 한국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양국은 일본의 한국지배를 과거 러시아가 보유한 이권이 일본에게 넘어간 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한반도에서 양국의 이해는 침해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양국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 방식 즉, 보호권이나 합방 등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태도로 연결되는 것이다.

3) 러일전쟁과 한국

러일전쟁과 戰後 열강간에 체결된 조약들을 통해 이루어진 이해관계 조정은 한국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열강들은 전쟁 초기에 일본이 한반도를 완전히 장악한 사실을 들어 일본의 한국 지배를 기정사실로 간단히 승인해 버림으로써 일본이 한국을 보호화 하고 이어 합방으로 나아갔다. 그러면서도 당시 한국정부나 국민들은 러일전쟁이 한국의 장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

인지 충분히 인식하고 대비했던가.

한국사회는 1903년 후반기부터 러일전쟁에 관한 풍문이 나돌기 시작하면서 제국주의의 침탈에 대항하는 반외세적 분위기가 팽배하였다. 러일전쟁 직전 《帝國新聞》의 한 기사는 다음과 같이 외세배격을 선동하고 있었다.

최근 여러 외국공사들은 소위 공사관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뽀뽀스럽게도 수천 명의 군대를 (서울로) 불러들였다. … 오늘날 소위 개화된 세계란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과거의 시대보다 더욱 악랄하다. 오늘날에도 이같은 행위는 똑같이 일어나며, 과거에 비해 신뢰·율법·수치심이 더욱 없다. … 약소국에 대해서는 공인된 법도 없는 상태이다. … 오늘날 각국들이 大韓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들의 깊은 분노와 근심을 자아내게 한다. 이들의 후안무치는 한계가 없다. 이들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의 눈에는 한국이란 두 글자는 존재하지 않겠지만, 우리 나라는 여전히 독자적인 정부와 (외세에) 대해 정당한 저항을 할 수 있는 힘을 갖춘 위엄있는 독립국이다. 왜 너희 신민들은 이들 후안무치한 외국군인들을 몰아내려 하지 않느냐! … 국가가 편안해야 나의 생명과 재산이 편안하다는 것이 만고의 법칙이다(《帝國新聞》, 1904년 1월 22일).²⁹⁾

한국정부는 러·일간의 전쟁은 한국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1903년 후반기부터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을 중립지대로 교전국들로부터 보장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고종은 1903년 8월 영국인 총세무사 맥레비 브라운(McLeavy Brown)에게 이에 관한 문서를 작성케 한 다음 일본과 러시아에 특사를 파견하지만 양국은 전쟁발발 자체를 부인함으로써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다.³⁰⁾ 러일전쟁이 일어나기 2주일 전인 1904년 1월 21일에도 고종은 왕실의 안위를 위해 서울과 인근 지역만이라도 중립지대로 보장받으려 했다. 고종은 벨기에 출신 고문인 델코뉴(M. Delcoigne)의 도움으로 중립선언을 작성, 밀사를 중국 개항장 芝罘(Chefoo)에 파견하여 이곳에서 한국의 이해를 대리하고 있는 프랑스 영사를 통해 러시아·일본 등 관련국들에 발송했다. 그러나 한국의 중립이란 열강들이 예견한대로 어느 한

29) Jordan to Lansdowne, 1904. 1. 22, FO/17/1659(20)의 첨부물.

30) Jordan to Lansdowne, 1903. 8. 26, FO/405/139(6).

《日本外交文書》36-1, 719・721~722쪽.

교전국(일본)이 전쟁과 함께 한국을 점령함으로써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³¹⁾

문제는 한국정부나 고종의 노력이 국제정세와 열강의 외교행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는 열강의 ‘보장’을 통해 왕실의 안위(독립도 포함해서)를 보존하려는 안일한 발상에 기인했다는 점일 것이다. 이에 관한 일화로는 러일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영국 *The Daily Mail*의 기자 맥켄지(Frederick McKenzie)와 당시 한국정부 실력자들 중 한 사람인 李容翊과의 대담이 있다. 후일 《한국의 비극(*The Tragedy of Korea*)》과 《자유를 위한 한국의 투쟁(*Korea's Fight for Freedom*)》 등의 저서로 친한 반일활동으로 유명하게 되는 맥켄지에게 이용익은 한국의 독립은 미국과 유럽 열강들에 의해 보장되었음으로 러·일간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맥켄지는 이에 대해 한국이 그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데 어느 나라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려 할 것인가 라고 묻자, 이용익은 미국이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있다. 미국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맹방이 될 것이다.” 이용익이 말한 미국의 약속이란 1882년 한미수교조약의 거중조정 조항을 말한다.³²⁾

그러나 당시의 국제정세, 특히 유럽의 열강관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들간의 동맹관계를 이용하여 한국의 독립을 지키려 노력한 외교관도 있었다. 러일전쟁 전 런던주재 한국공사관의 李漢應 서리공사가 바로 그 인물이다. 이한응은 러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904년 1월 13·19일 두 차례 런던 외무성을 방문하여 한반도 정세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담은 장문의 메모와 각서를 수교하였다. 이한응은 이 각서에서 일본과 러시아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戰後의 지역정세는 戰前과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런 상황에 비추어 영국이 열강과 양해를 통해 전쟁에서 어느 쪽이 승리하든지 관계없이 한국의 독립·주권·영토 및 특권 보존을 위해 새로운 보장을 해줄 것을 요망했다. 그는 한국의 독립이 동아시아는 물론, 전세계의 평화를 유지하

31) 이 시기 한국의 중립화 시도에 관해서는 구대열, 〈대한제국 시대의 국제관계〉(《대한제국 연구》Ⅲ, 한국문화연구원, 1985), 24~28쪽 참조.

32) Frederick McKenzie, *Korea's Fight for Freedom*(New York : Ravell, 1920), pp. 77~78.

는 데 필요불가결하다는 자신의 주장을 수 개의 도표를 통해 동아시아의 지역정치를 범세계적 차원의 세력균형 체제와 연결, 설명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증명하려 했다.³³⁾

영국 외무성은 이한응의 메모를 철저히 검토하지만 당시의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그의 외교적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에 실망한 이한응은 1905년 5월 12일 자결했다. 이 사건은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기 6개월 전의 일이며 이 시기 최초의 순국으로 기록될 것이다.

〈具汰列〉

33)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구대열, 〈李漢應과 한-영관계-그의 한반도 중립화안을 중심으로-〉(《성곡논총》 16, 1985) 참조.